

# 의원 정책 연구회 세미나를 준비하며

## 의원 정책 연구회

### ○ 목적

- 플라톤은 인간은 공동체에 나와 말하는 존재라고 했다. 그의 제자는 스승의 말을 받아 인간은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이라고 정의했다.
-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플라톤이 비판했던 ‘콩콩대는 동물’로 살고 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 정치는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개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발언하고, 함께 세상을 이룸 짓는 과정이다. 정치가는 이를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와 공동체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계획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철학, 시민,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의 본질과 실천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 ○ 일정 및 학습계획

차수	날짜	주제	비고
1	9.4.화.	정의는 정의로운가? (정치와 정의)	
2	9.18.화.	국민, 시민, 대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치와 시민)	
3	10.20.토.	정책세미나 1: 정책 사례연구	워크숍
4	10.23.화.	철학은 어떻게 정책이 되는가? (정치와 정책)	
5	11.6.화.	정치(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와 정치가)	
6	11.17.토.	정책세미나 2: 정책현안 연구	종강 워크숍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정의, 이념, 이론), 세력(시민 국민, 대중), 정책(법, 제도)을 통해 정치의 본질을 이해한다.

## ○ 진행방법

- 정책연구모임은 4번의 세미나와 2번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정치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리강의를 듣는 것으로 진행된다면, 워크숍은 정책의 본질과 현안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진행방법은, 첫째, 참여자들은 던져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둘째, 토론에 대한 정리강의와 질의로 마무리한다.
-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연구모임은 이 원칙에 기반해서 경청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을 통해 당당한 시민과 풍요로운 공동체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 인천 시의원 정책연구회

인천은 주거환경과 관련 신도시와 비교해 도시쇠퇴지역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환경, 노동환경, 양성평등 등 사회 곳곳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행을 위한 연구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시의원 정책연구회는 정책분석틀 학습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여는 광장이 될 것입니다.

## 시의원 정책연구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 손 민 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 강 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국 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 성 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 종 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 준 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남 공 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노 태 손 의회운영위원장  
민 경 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 성 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백 종 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안 병 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 병 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용 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조 선 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 성 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1강. 정의는 정의로운가

## 1. 정의들

### 뉴올리언즈와 정의



동화에서 본 장면은 2005년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의 사태를 다룬 것이다. 이때 도시의 80%가 물에 잠긴다. 그리고 2천여명 가까이 사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를 당한 지역이 대부분 빈곤지역이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인데, 뉴올리언즈는 67%이다. 이것은 빈곤층 지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곳은 전부 빈곤층이라는 것

이다. 부유층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는다. 복구의 경우 부유층 지역부터하기 시작한다.

마땅히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판매업자가 몰려 올 것이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범위가 컸기 때문에 복구의 진행이 매우 더뎠다. 그러는 과정에서 빈곤층이 피해를 받고, 돈은 부유층이 버는, 저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업자들이 돈을 벌게 된다.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일까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옳으냐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본다. 여우입장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과 고민이 있다. 또 두더지 입장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주정의당과 정의당



정말 정의는 어떤 것일까, 정의는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민주정의당, 즉 정의당은 한국정치에서 오랫동안 집권했다. 1981년에 소위 이야기하는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대통령후보를 지명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때 민정당이 내세웠던 것이 정의로운 사회구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진보 정당들 중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정의당이다.

그러면 저 정의당과 민주정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의들 중 어떤 것이 정의일까? 둘 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보수적인 정당과 진보적인 정당이 둘 다 실현한다고 하니 누구의 정의가 진짜 정의인

것인가? 양자는 각자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가 부정의고, 비정의일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앞서 언급했던 민주정의당의 비전도 정의사회구현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민정당의 정의는 같은 것일까? 정말로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자 갖고 있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하는 것이다. 즉 당신은 어떤 정의관을 갖고 있느냐, 그 정의관은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 2. 정의의 원칙

### 정의의 여신과 달달눔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할까. 동화 속에서 눈가리개를 쓰면서도 상당히 눈물도 흘리고 자기도 어쩔지 모르는 인간적인 미카엘 요정이 나왔는데 다람쥐 소녀가 과연 눈가리개를 벗겨줄 수 있을까?

1494년도에 브란트라는 사람이 바보배라는 글을 썼다. 바보가 100명이 탄 배이다. 거기에서 74번째 바보가 디케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눈먼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깐 정의의 여신 디케 조차도 동화에 의하면 누군가가 눈가리개를 씌웠다는 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눈을 보라고 ‘달달눔’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는 정의의 여신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의심을 해결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정의를 이해하는 원칙이 있다.

### 통과 사람

통이 있다. 통에는 보통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첫 번째가 저 안에서 적응하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적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저 밑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애인일 수 있고, 실업자일 수 있고, 아니면 취업하기 힘든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들을 우리가 한다면 서있는 사람이 유리할테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면 누워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필요냐, 능력이나 조차도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통이 싫어 아예 뛰어 나왔다. 통이 싫다고 뛰어나오게 되면 자기의 근거지를 버린다는 것이다. 저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어나왔지만 안전하려면 저 통을 넓히면 된다. 그러면 뛰어 나온 사람은 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통 안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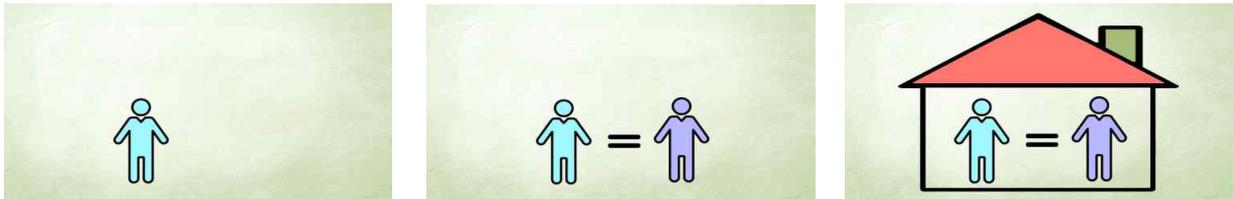
통은 사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능력이냐, 저 사회의 능력이냐를 따져야 한다. 내가 나의 능력을 따질 수 있지만 그 사회의 능력을 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능력이 필요에 따라 줄 수 있는 사회도 있고, 자원이 너무 적어서 필요에 따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원이 너무 적을 때, 뒤쳐진 사람만 주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조차도 안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저 통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필요냐, 능력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필요냐, 능력이냐는 구체적인 통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정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필요냐 능력이냐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의는 어떠한 포인트, 지점을 갖고 논의되어야 할까. 저 정의에서만 보아도, 통, 사람의 상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봐야한다. 그러니 정말로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를 주장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전제는 무엇인가. 생산력이 높아 모든 인류가 쓸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이다. 한편,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정한 정도의 최소한의 것까지는 필요에 따라 주고, 최소한 것을 넘어서면 능력에 따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이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상이한 주장을 한다.

### 정의를 따지는 원칙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것인데, 정의론은 우리 일상의 것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민될 수 있는가를 하는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때 정의를 따지는 원칙을 하나하나 보자.



정의를 논의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다.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윤리적인 존재인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타적인 존재인가. 나에 대한 이야기, 인간론이다. 두 번째는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다. 저 다른 사람과 나와서 관계가 평등한가 아닌가이다. 플라톤 같은 이는 철학과 수학을 잘 하는 통치자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수호자 계급이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일이나 하는 생산자 계급이 있다.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정의가 무작정 평등하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논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있어 통은 무엇일까, 그가 보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를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상당히 평등한데, 영국유학시절 어느 교회에 가서 나이가 70대 중반되는 분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길을 가는 6살 꼬마가 그 노인에게 “하이 마이클” 하고 인사했다. 우리의 통과 서유럽의 통이 다르다. 통에 따라 명칭자체가, 용어자체가 달라진다.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지도교수의 이름을 못 부른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통과 문화가 다 다른데, 저 둘의 관계가 평등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저 통

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의를 논의할 때, 저 통이 어떻게 생겨먹은 통이냐, 그 다음에 저 통은 어떤 위계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내는 통이냐, 아니면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통이냐. 나와 타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고민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나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관계들 속에서 어디 까지를 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예를 들어 내가 남성인데, 여성은 나와 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가부장제 관점을 갖는 것이다. 토마스 모어를 보면 놀랄 만큼 평등한데,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성소수자, 난민은 어디까지 원주민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전시켜보면 평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그리고 평등의 범위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통, 사회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사회를 관리해야하는가, 사회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나 개인의 인간성은 문제가 있느냐,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느냐를 볼 것이다.

철학자를 찾아다니며 맨 마지막에는 저 그림을 그릴 것이다. 저 속의 관계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고, 저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나는 존재는 어떻다고 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해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무지개 소녀가, 미카엘이 동의하는 집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저 원칙들을 정의를 바라볼 때, 분배를 필요냐 능력에 따라 할 것이냐, 필요냐 능력이냐를 바라보는 저 사람, 그리고 관계, 가능하게 하는 통을 보면서 계속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의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은 과연 계속 눈가리개를 써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 벗어야 될까, 어떤 때는 항상 쓰고 있는 것이 더 정의로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벗는 것이 정의로울 때도 있을 것인데 어느 때 쓰고, 어떤 때 벗어야 하는가. 어떤 집 속에서 쓰고 어떤 관계 속에서 벗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보자.

# 1강 후기

---

이른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정책연구회 첫 모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금번 정책연구회의 대표 강의를 맡아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유범상 교수님과 간사로서 이번 모임을 지원할 사단법인 마중물 이동훈 사무처장의 소개 및 참석 의원님들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대표의원 손민호 의원의 정책연구회에 대한 방향 해설과 이 후 정책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철학적 방향을 잡아주는 “정의는 정의로운가?” 라는 주제의 유범상 교수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후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고 있던 생각 당하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갇혀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참석 의원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준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
민경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백종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조선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2강. 국민과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 시민교육의 방향과 조건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

#### 1.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편인가

봉건제 사회는 신이 중심이 된 사회이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 신민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신의 의지를 알아내는 성직자가 제1계급이었다. 근대는 신이 아닌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간인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이 선언을 한 데카르트는 신을 믿었을까? 그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렇다면 나와 신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 신이 계신다’ 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신의 존재는 인간이성의 검열을 거쳐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근대 이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나이다.

생각의 주인이 인간 개인이라는 선언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모두에게 공포된다.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언론, 출판, 집회, 종교, 양심 등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간이 시민이다. 즉 시민은 말할 자유가 있는 존재이다. 인권선언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시민은 생각할까? 히틀러에 동의하거나 순응 혹은 방관했던 시민들은 생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히틀러의 생각을 상식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동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던 선전부장관 괴벨스는 시민들이 생각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의 통에 간혀 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는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시민들은 생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와 괴벨스와 같은 예외적 권력 하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생각의 주인자리를 시민들에게 순수히 넘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은 생각의 주체가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언론, 경찰 등을 통해 늘 시민들에 생각에 관여한다.

권력이 통치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폭력과 동의이다. 군대, 경찰, 감옥제도 등을 통한 폭력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낮은 반면 교육, 언론, 문화 등을 통한 동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권력은 동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시민교육으로 집약된다. 이런 점에서 악의 평범성은 히틀러 정권의 억압보다도 적극적인 시민교육의 결과이다. 그런데 시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된다. 포장지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회권을 강조하는 서유럽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시즘,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모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민주시민교육은 누구의 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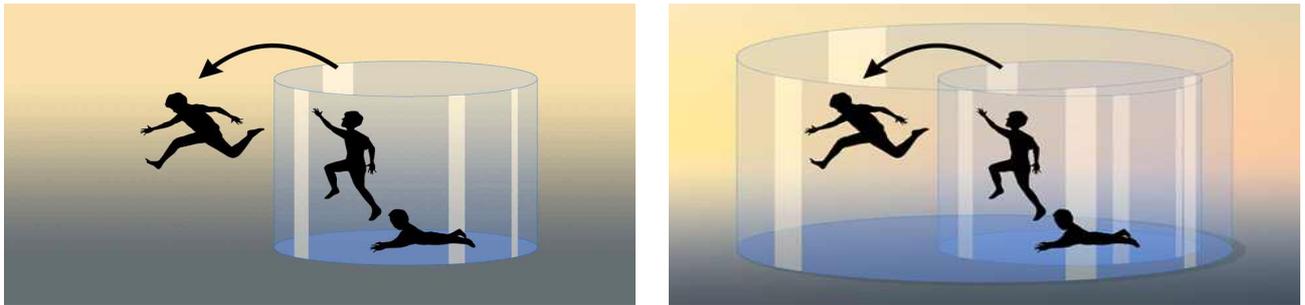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민주시민교육 ‘들’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제기되는 시민교육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본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면, 즉 주체와 의도를 문제삼아 오늘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제는 통과 달달놈이다

통과 사회권

통이 있다. 통속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견디기 힘들어 튀어 나온 사람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튀어 나온 사람과 쓰러진 사람을 적응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라고 전제하려면, 통이 정의로와야 한다. 만약 통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통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림 1] 통과 사람



통을 넓힌 그림이 [그림 1]의 오른쪽이다. 통이 넓다면 왼쪽 그림에서 튀어 나온 사람도 사실은 통 속에 있는 것이다. 쓰러진 사람도 좁은 통에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넓은 통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아니라 통이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문제인 사람을 사례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통이 문제라면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리는 인성교육이나 시민적 덕성처럼 개인의 윤리와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사회의 관리는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의료, 교육, 소득, 주택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민교육은 통을 넓히는 것을 그들의 권리로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힘을 시민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힘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나 덕성교육과는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말할 권리인 자유권을 부여한다.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 등의 자유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 보장한다. 그런데 이 권리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 않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잘못 말했다가는 해

고를 당하는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소신껏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유권과 정치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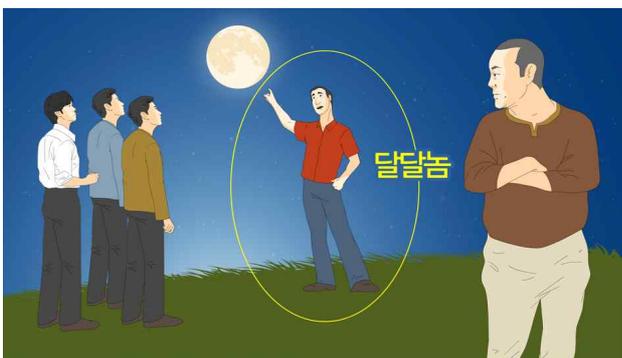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통, 즉 사회는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된 체제다. 자본은 시민들의 생각에 관여하여 생각하는 시민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소비자로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나의 욕망과 생각은 자본이 개입한 것일 수 있다. 자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회사 사장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현상은 생존권력의 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본으로부터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사회권을 권리로써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조건에 관한 권리이다. 베버리지는 결핍은 소득보장으로,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질병은 공공의료로, 불결은 공공주택으로, 나태는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권리로써 보장한 것이다. 이처럼 서유럽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통을 넓히는 것이었고 이것을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비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즉 사회권을 부여할 때 좀 더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을 통속의 인간으로 보고, 이 인간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발언권과 조건을 공유하는 것이다.

### 달달놈과 시민권력

[그림 2] 달달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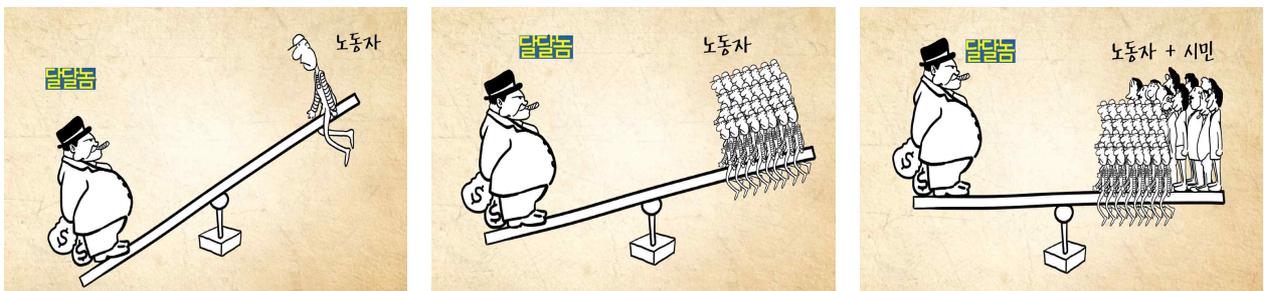
독일시민들은 왜 파시즘을 지지했을까? 전후 독일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 그 결과 독일 시민들이 달달놈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가운데 사람이 사람들에게 달을 가르키며 보라고 하고 있다. 달을 가르키며 달을 보라는 이 자를 달달놈이라고 칭해보자. 사람들은 그가 가르키는 달을 보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람은 달이 아니라 달달놈을 보고 있다.

“왜 달을 보라고 하지, 달을 보면 누구에게 유리하지, 이것을 통해서 저 달달놈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한마디로 달이 아니라 달달놈을 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히틀러와 괴벨스를 보지 않고 그들이 가르키는 달을 본 것이다. 그래서 전후 이들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안을 만들고 실천했다.

- 첫째, 절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다.
- 둘째, 모든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다.
- 셋째,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통을 보고 이 통을 정당화하는 달달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통과 달달놈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민주시민교육은 혼자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림 3] 달달놈과 시민들



[그림 3]에서 왼쪽 그림은 혼자서 달달놈에 맞서는 것이다. 청소년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런 권력상황에서 자신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취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처럼 단결해서 단체교섭으로 말하고, 갈등이 생기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것을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권리로써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사회권을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고 실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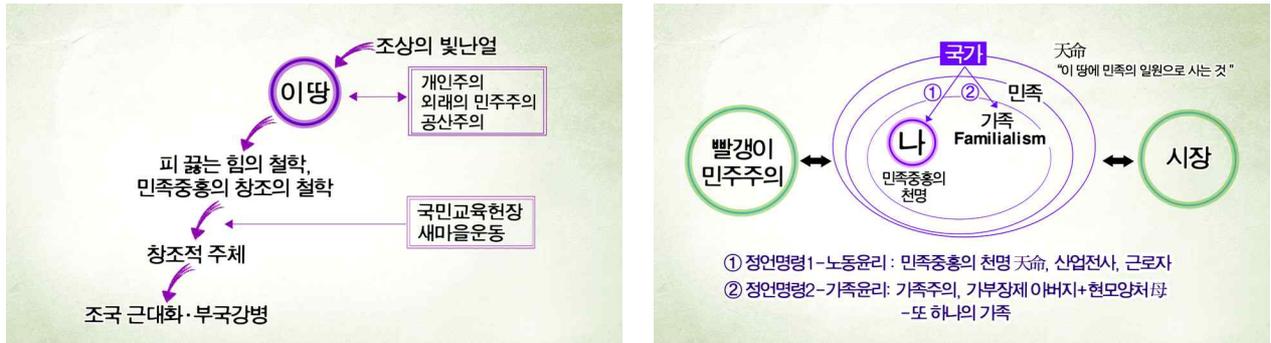
### 3. 민족중흥, 인성교육 그리고 성공한 개인으로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사회권을 보장한 통과 이 통이 가능할 수 있는 시민권력을 가져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권이 권리라는 것과 이 권리가 가능한 기초가 시민들의 연대에 기반한 권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학습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민주시민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국민교육헌장이고, 오늘날 인성교육, 그리고 인문학과 정의론 교육이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다. 국민교육헌장은 1990년대 폐지되기까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실천지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국민교육헌장은 지식인 그룹에 의해 기초되고 정초되었는데, 특히 서울대 철학과를 만든 박종홍교수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4] 국민교육현장의 설계도면



국민교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 ”

[그림 4]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박종홍은 우선 이 땅을 볼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주의와 외래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 땅에서 국민교육의 설계도면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그릴 때 조상의 빛난얼을 참조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이 정신을 체현한 존재가 화랑도이다. 이 얼에 기대어 피끓는 힘의 철학인 민족중흥의 창조철학이 나와야 한다. 이 철학에 의해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주체가 창조적 주체이다. 창조적 주체는 민족중흥을 체현한 존재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이다. 이 주체들이 모여 조국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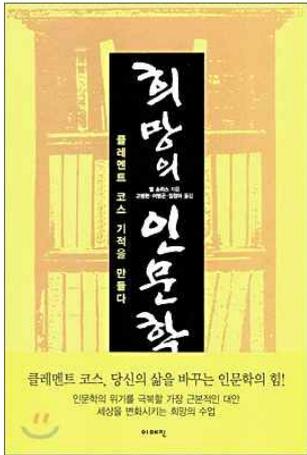
박종홍의 철학은 국민교육현장으로 구체화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은 ‘이 땅에 민족의 일원으로 사는 천명을 타고 태어난 나’이다. 이런 민주시민은 민족의 천명 즉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윤리를 체현한 존재이다. 또는 이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족윤리를 체현한 존재이다. 이처럼 국민교육현장은 노동윤리와 가족윤리를 체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민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은 국가에 대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민족중흥에 헌신하는 것을 천명으로 산업전사와 가부장제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민주주의가 자유권과 사회권을 요구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

### 인성교육과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국민교육현장의 민주시민은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경제위기로 해체되는 듯이 보인다. 우선 인성교육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말 그대로 시민적 덕성을 문제삼는다. 이 교육의 구도는 경쟁과 돈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사회가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 경쟁과 돈을 중시하지 않는 인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여기엔 통을 바꾸고 그 바꾸는 주체인 시민들의 집합적인 권력에 대한 구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림 5] 인문학과 정의론



한국 200만 부 돌파,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이클 셴델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김찬욱 강수  
전명우 옮김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오리건 CBS 현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셴델이 대표적  
국민경제학자이자 우수 이코노미스트  
최고 권위자로 인정 받은 '정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올바른 신성 대의심성 후천도서

시민사회에서는 인성교육보다 더 세련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문학과 정의론 교육이다. 인문학의 주요 텍스트가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라면 정의론 텍스트는 마이클 셴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이 교육은 도서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두 교육의 내용은 모두 통을 문제 삼지 않는다.

희망의 인문학은 취약계층에게 시내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고 요구한다. 이 논리는 문제의 원인이 자립, 근면, 자조하지 않는 개인의 삶의 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시내 중심가 사람, 즉 잘 적응하는 사람은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으로 전제한다.

마이클 셴델의 정의론도 공동체의 텔로스를 시민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장한다. 텔로스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목적과 지향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그는 이 맥락에서 시장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형태, 즉 장기매매, 대리모출산, 대신줄서서 티켓 끊어주기 등을 비판하지 시장의 불평등을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사회 복지가 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 봐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얼 쇼리스와 마이클 셴델은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으로 보았다. 이것은 통과 불평등, 더 나아가 달달놈을 극복할 집합적인 시민권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계급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시민교육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국민교육현장의 민주시민은 분명 민주화를 거치면서 극복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과 인문학, 그리고 정의론은 과연 달달놈에 맞서는 것일까, 더 나아가 사회권을 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성공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 4.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민주시민교육은 누구의 편인가?”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보편적이면서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교육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주장도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교육현장, 인성교육, 인문학, 정의론 등은 관점에 따라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갈등적일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인간다운 조건을 권리로 규정할지, 그리고 그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교육현장처럼 위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주어져서는 이 갈등이 억압되고 봉합될 뿐이지 해소되거나 합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상을 제시하고 이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갈등과 토론의 광장을 만드는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통을 이해하고 이 통이 시민들의 삶을 더 넓고 더 깊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이제부터라도 이 권리는 달달놈에게 함께 맞설 수 있는 시민력을 가질 때 획득될 수 있기에 사회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시민교육인지, 누구에게 어떤 민주주의인지,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 논의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강 후기

---

이번 정책연구회는 2강은 지난 1강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예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우리의 정치에서 기생하던 정치꾼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과 기초를 결정하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로서 어떤 방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인천지역사회의 정치가인 우리들이 담고 있는 통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통을 더 넓고 깊은 통으로, 모든 시민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꾸기 위한 정책 담론들이 이야기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참석 의원

손 민 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 국 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 성 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 종 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 준 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 태 손	의회운영위원장
민 경 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 성 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안 병 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 병 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용 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조 선 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 성 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3강. 정책사례 연구\_ 복지국가와 사회권

### 1. 천국이 예정된 착한 사람

#### 관점

자본주의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되려면 얼리버드, 즉 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벌레를 잡아먹어야 한다.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왜 자본주의라는 구조와 권력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할까?

푸코는 권력이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누르고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권력의 이미지는 폭력이었다. 중세에는 잘못하면 군주가 잡아다가 화형에 처한다. 거형이라고 팔다리를 말에 묶어서 찢어죽이게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권력은 생권력(bio-politics)이다. 즉 근대가 되니 감옥에 가두고 일과 기술을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 내 보낸다. 권력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이 인간화되었다는 말인가? 푸코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권력의 전략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억압해야 두려워했는데 점차 사람들은 억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이 전략을 바꿔서 부드럽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푸코가 이야기하는 생권력론이다(푸코, 2016).

한편, 근대권력은 굉장히 그물망처럼 도처에 미시적으로 퍼져서 작동한다. 국가는 직접 시민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전략에 걸린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고 각자가 싸운다.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국가권력의 이야기를 받아 들인 엄마가 자식에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라고 말하면서 자식과 갈등을 겪는다. 노동운리를 만들어서 유포한 국가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운리를 체현한 엄마와 아들이 싸운다. 이렇게 근대 권력은 전략을 바꾸었다. 이처럼 사람을 통치할 때는 폭력이 아니라 동의하게 해야 한다. 권력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의론을 이론화한 사람이 그람시다. 레닌이라는 러시아에서 짜르를 무찌르고 혁명에 성공했는데 본인도 똑같이 이탈리아에서 했는데 감옥에 간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는 곰곰이 생각한다. 그의 답은 시민사회의 동의에 있었다. 러시아는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아 짜르(왕)를 제거하면 되지만, 이탈리아는 시민사회가 있으니 왕을 치더라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처럼 폭력보다 더 중요한 권력은 동의다. 이를 그람시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헤게모니는 정치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리더십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은 것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효과적인 방법이 소셜이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주인공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일군다. 따라서 노력하면 된다. <피노키오>는 노력하는 노동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피노키오가 열심히 하니 사람이 되었다.

## 이기적인 착한 사람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기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때에는 땅이 누구 것인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라든가 영주에게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다. 점유권이 있었지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땅이야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한편, 중세관념에서 재물을 쌓는 것은 몇몇하지 못한 짓이었다. 이기적인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이처럼 부르주아지는 새로운 세상에 주인이 되긴 했는데, 정당성을 갖지 못했다. 정당성이 없다면 푸코나 그람시에서 보면 이들은 역사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가들이 나타난다. 로크가 대표적이다. 로크는 모든 이 땅의 존재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인간의 것이 되려면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변형시키면 인간의 것이 된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얻게 된 정당한 것이다.



한편 이윤을 추구하려는 부르주아지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를 정당화한 이론가는 아담 스미스이다. 생수 한 병이 보통 1000원 한다고 하자. 그런데 개인이 만들면 도저히 천원이 될 수 없다. 제주도의 암반수가 원료인데, 돌을 뚫어 물을 뽑아 정화시켜 병에 넣고 유통시킨다면 천원에 팔 수 있을까? 아마도 백만원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질 좋고 싼 상품이 되었을까?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 맡겨두고 인간의 이기심에 맡겨 발휘하라고 했더니 내가 싸게 하고 질 좋아야 팔리니 대량생산을 하게 되었고, 시장경쟁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말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이기심 때문이지 이타심 덕택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심을 맡겨 발휘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게 되면 사회가 다 좋아진다고 보았다.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의 가격이 싸서 좋고, 부르주아지도 대량생산하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으며, 국가는 또한 어마어마한 재화와 상품을 만들어 세수를 확보하고 GDP가 올라 좋다. 이기적일 때, 모두가 좋은 것이다. 이때 국가와 법률은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범죄자만 막아 주면 된다. 이상에 보듯이 중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벌려고 하니 예수가 성전 정화라고 해서 이를 물리쳤다. 그러나 근대가 되니 이기적인 것이 사회를 위하는 것으로 찬양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착한 행위가 되지만 부르주아지 개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즉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이가 종교개혁의 예정설이다.

## 천국이 예정된 사람

예전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보았다. 가톨릭에서 연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잘 살다 왔으면 천국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런 주장에 종교개혁가 칼빈은 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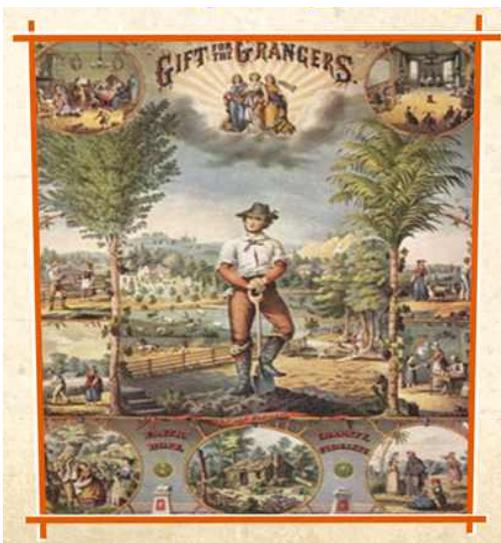
를 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다 살아 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전지전능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진다. 내가 천국갈 것 같은가, 아닌가. 이에 대해 캘빈이 답한다. 그는 하나님의 논리를 잘 따져 보니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이 천국에 간다는 증표라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직업소명을 받들어 검소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돈의 축적인 것이다. 직업소명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은 당연히 재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게 된다. 이 주장을 담은 책이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상의 논리에 따라 천국이 예정된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 논리에 따르면 지옥이 예정된 게으른 사람은 쌍꺾로트이다. 완전히 관점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처럼 로크라든가, 아담스미스라든가 캘빈 등을 통해서 부르주아지들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개신교는 부르주아지들의 구미에 딱 맞게 된다. 그래서 개신교가 급격히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정당화된다.

### 피노키오처럼 열심히 일해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되라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무인도, 개척자, 탐험가, 근면성실, 열심히 산 사람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 로빈슨 크루소는 삼각무역을 했던 무역업자다. 그는 돈을 벌기위해 나갔다 표류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의 아버지는 요멘 계급이었는데, 그림처럼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요멘 계급이다. 요멘은 빌라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중간층이다. 아버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상층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사치를 하다가 망한다. 하층은 빈곤 때문에 망한다. 세상에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중산층인 요멘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요멘으로 살기를 바랐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그것보다 부자인 젠틀리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돈을 벌러 떠난다. 1차 실패하고 2차에서 돈을 버는데 3차로 갔다가 표류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무인도에 표류해서 요멘 계급의 행위를 한다. 즉 열심히 노동하고 축적한다. 그리고 그 축적을 할 때마다 울타리를 치고 자기 땅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감사기도를 한다.

이런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로빈슨이 두 번째 여행을 하다가 붙잡힌다. 그리고 탈출하면서 주리라는 노예를 데리고 나온다. 로빈슨은 주리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말을 잘 듣는데도 나중에 육지로 와서 주리를 팔아먹는다.

무인도에 표류해서 만난 흑인에게도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냥 금요일에 만났으니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는 말한다. “나는 마스터야.” 즉 주인이라는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 안에는 부르주아지의 우월성과 자부심과 제국주의적 면모가 있다.



포도밭의 경작 (루카스 크라나흐 1569년)

당시 부르주아지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루카스 크라나흐의 <포도밭의 경작>이다.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다. 왼쪽은 밑부분이 어둡고 가운데가 밝다. 포도경작이 잘 된 것 같지 않은가. 오른쪽은 아래가 환하고, 위가 어둡다. 왼쪽은 개신교의 신자들이고 오른쪽은 가톨릭의 성직자들이다. 가톨릭은 의식을 화려하게 하지만 정작 포도밭은 가꾸지 않는다. 반면 개신교는 의식은 검소하지만 열심히 일해 포도밭을 풍성하게 한다. 당시의 부르주아지들을 정당화하는 그림으로 보면 된다.

이제 <피노키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는 빈곤층이었다. 진짜 피노키오를 만든 이유는 노후에 이 아이에게 꼭두각시 인형극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노키오라는 이름도, 제팻또가 알고 있는 이웃집 중에 가장 화목한 집안에서 따 온 것이다. 그런데 매일 놀러 다닌다. 이때 요정이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든다. 그녀는 피노키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 공부의 내용을 보면 기술학교다. 결국 피노키오는 그녀의 말을 듣는다. 피노키오는 이제 기술도 배우고, 일도 거들고 아버지를 편히 모시려고 한다. 결국 피노키오는 기술도 배우고 일도 거들며, 아버지를 책임진다. 즉 노동윤리와 가족윤리를 배운다.

이 소설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 성실, 근면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너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피노키오는 결국 사람이 된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읽기를 배우고, 내일을 쓰기를, 모레는 셈하기를 배워야지, 그러면 푹푹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피노키오가 저런 결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 오늘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양수기를 돌리기 시작한다. 양수기 돌리는 일을 해볼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제안 받는데, 백 양동이 끌어올려 주면 우유 한컵을 준다고 한다.

<피노키오> 소설에서 피노키오는 난생 처음 땀이 흠뻑 젖는 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사람이 되어 이제 피노키오는 기쁘다고 하는데, 이것은 슬픈 행복이 아닐까.

## 2. 벼룩이와 달달눔

###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데카르트다. 데카르트는 인간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이런 주장은 상식이다. 하지만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중세에는 생각은 인간을 만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존재가 성직자다. 따라서 성직자가 1계급이었다. 데카르트는 신앙인이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한다고 했을까? 그는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말한다. 즉 근대라는 것은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아는 것이다. 중세 때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면 안된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진리였다. 이런 점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인권선언이다. 이전에는 신의 백성, 신민이었는데 이제 인간을 선언한 것이다.

### 부르주아지, 생각하는 인간의 탄생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일까? 근대를 만든 주체는 부르주아지들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대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명문화된 조항이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1조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공공성에 맞을 때만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다. 그런데, 인권선언 2조로 가면 고민을 하게 되는 항목이 눈에 띈다. 2조는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는 자유권이다. 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이다. 자유권은 말할 자유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권리에 소유권이 들어가고, 17조로 가면 소유권을 신성불가침권으로 규정한다. 당시에는 재산권을 권리라고 선언하는 것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하나님이 생각했다.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산, 물, 공기, 토지 등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중세의 지배계급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유권 특히 제도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중세에는 원리상으로는 재산에서는 평등한 것이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17조에 가면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누구도 저것을 빼앗으면 안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지 모르나 가진 사람에게는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권리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권리선언은 핵심적인 것이 자유권,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기도 하지만 이면에 보면 재산권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만 말할 권리가 있다. 정치적인 장에서. 이것이 투표권이다. 1차 선거법이 개정될 당시 투표권을 가진 자가 5% 미만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권이라는 말할 권리는 실상 재산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 라 보에시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우리가 재산을 당해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은 그것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플라톤이 이야기한 ‘콩콩대는 동물’은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한다. 특히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인권은 있는 것일까. 따라서 인권에 말할 권리의 조건에 대한 것까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왼쪽 그림에서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나라의 국왕에게 의식을 행사하고 있다. ‘왕이 시어, 당신의 땅을 발견했나이다.’ 그리고 나서 둔덕에 가서 제일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보호하소서’ 할 것이다.



우리는 콜럼버스가 영웅이고, 모험가고, 탐험가고, 개척가이고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간단히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보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다. 누가 그 돈을 보고 ‘야 돈 발견했다!’ 라면서 외친다.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나 돈 발견했어” 라고 하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갈 때 교회 들러서 십일조를 한다면, 그러면 제정신인가. 이게 콜럼버스 아닐까.

콜롬부스는 인디언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살고 있지? 무인도인가? 토지는 누구의 것이지?” 알아보고 그 토지를 가질지 말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깃발 꽂고 ‘내땅이다’ 고 선언한 것이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실제 인디언들은 이들을 침략자, 학살자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콜럼버스를 위인이라고 할까.

본 강의에서 문제삼는 것은 학살자를 탐험가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왜 두 관점을 모두 가르쳐 주고 우리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누군가 서구의 콜롬부스에 대한 관점만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이 질문의 맥락에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나무꾼이 마음에 드는 선녀들의 옷을 훔쳐 아이낳고 잘 산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이다. 나무꾼이 옷을 훔치고,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하고 강제적으로 데리고 산 것이다. 선녀는 강제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따라서 미투의 관점에서 보면 탄생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가부장제 관점에서 보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은 아름다운 사건이다.

질문해 본다. 누가 우리에게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미화했는가? 가부장제의 관점 말고 미투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두 관점을 보고 선택은 내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상의 두 사례는 모든 관점들을 보고 배운 다음에 선택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선택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날 보니 누군가에 의해 내 생각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생각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인 것이다.

### 헬렌 켈러, 무엇을 하며 88세까지 살았을까

헬렌 켈러의 경우도 생각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일지 모른다. 그녀는 20세 까지 중증장애를 극복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20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88세까지 생존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첫째, 21살부터 68년 동안 저 유명한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둘째, 왜 우리는 그녀가 뭘하고 살았는지를 모를까?

그녀는 장애를 극복한 이후 사회당에 입당해서 보편적 복지 운동을 전개했다. 그녀는 말한다. 노동자들의 불행은 고용주들의 이윤 때문이다. 미국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그 이면에 미국의 총기업자 등의 군수산업체가 그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 나간 것이다.

여성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와 미국은 정의롭지 못하다.

헬렌 켈러의 활동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다면, 전반기는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개인이고, 후반기는 사회활동을 통해 구조와 권력관계를 비판한 운동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후반기를 모른다. 왜 모를까? 로웬이라는 역사가자가 10년 동안 미국의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대답한다. “모르겠는데요!” 미국아이들은 왜 몰랐을까? 헬렌 켈러는 미국의 CIA나 FBI에 의한 감시 대상이었다.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이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인데, 전반기 헬렌 켈러는 이 이상에 들어 맞았다. 하지만 후반기 헬렌 켈러는 급진적인 주자이었다. 문제는 자본주의와 미국의 권력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작 헬렌 켈러 자신은 “나는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로 남고 싶지 않다. 나는 오히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헬렌 켈러로 남고 싶다” 고 했다. 과연 우리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 달달눔과 생존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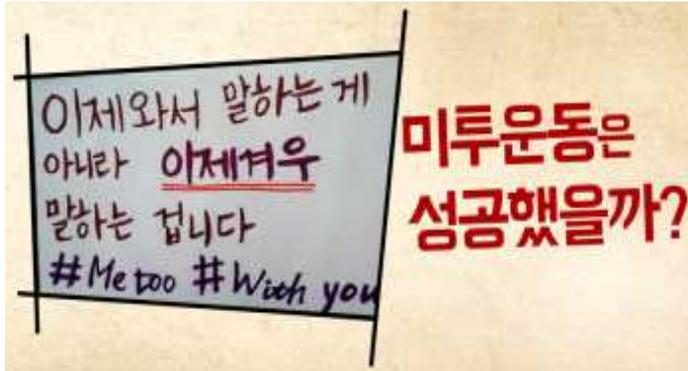
데카르트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온 지식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들이 제대로 왔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림에서 가운데 청년이 “달을 보라” 라고 하니 앞의 순진하게 생긴 친구들이 달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헬렌 켈러를 보아라. 장애를 극복했어. 노력하면 돼!’ 라고 말하니 청년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격이다.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는 청년은 달을 보라는 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앞의 청년이 달을 보라고 하니 달을 보는 것이고 뒤의 청년은 달을 보지 않고 달을 보라는 놈을 보는 것이다. 후자의 청년은 생각한다. ‘저 놈이 왜 달을 보라고 하지, 달을 보면 누구에게 유리하지, 저것을 통해 저 놈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무엇이지?’

달도 봐야 하지만, 달을 보라는 놈도 보아야 한다. 달을 보라는 놈을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전제는 비판이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이면, 맥락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비판을 가르치는 것이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 전반부만 가르치면서

헬렌 켈러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생각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투운동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미투운동은 ‘이제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말하는 겁니다’ 인데, 이렇게 겨우 말할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은가. 실제 이제 겨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다 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겨우 이야기하는 사람은 검사, 기자, 전문직 여성들 외에는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회사라든가,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테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의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텐데 그 사람들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러할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한 것을 말할 때 엄청난 생존권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투운동은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투운동이 지나간 다음에 억압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절대 기사는 건들지 말자. 절대 검사는 건들지 말자! 이런 점에서 권력의 관점에서 인권을 논해야 한다. 특히 생존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놔두고 인권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자체는 좋은 것이다. 청소년들도 시민인 것이고 너희들에게 인권이 있으니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권리를 요구할 때,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작성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할 때, ‘야간노동은 반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다. 최저임금은 얼마다,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다’ 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은 이 정도의 정보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노동현장에 가서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야기하는 순간,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실습학생이 사망을 한 경우와 구의역에서 청년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이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이런 저런 권리들, 즉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이야기해주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방법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즉 단체교섭으로 협상되지 않을 때, 반드시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실습도 해야 한다. 인권은 권력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서유럽의 아이들은 실제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1/3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배우고 실습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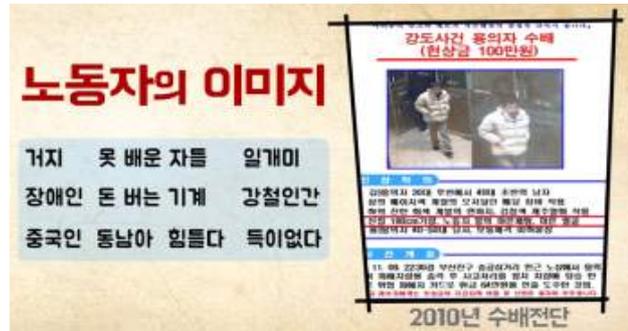
## 한국의 노동자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노동자 이미지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거지, 강철인간, 힘들다, 못배운 자들 등의 단어가 튀어 나온다. 이러니 모든 아이들은 노동자 되고 싶지 않다. 이 노동

자의 이미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택배 노동자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더니 “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고 말한다. 이런 시민들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2010년 강도사건 용의자 수배자 전단지에 ‘신장 180cm 가량에 노동자 풍의 마른 체형’ 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단결하면 이기주의자, 경제위기주범, 빨갱이 등의 비난이 쏟아진다.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 단체행동 등을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불경스럽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건이 모 회사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회장은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온갖 욕을 다하면서 ‘주인 차는 그렇게 다루냐’

고 화를 낸다. 운전기사는 계약을 맺어 노동력만을 판 것인데, 회장은 그를 노예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인식에서는 중세는 농민노예, 즉 농노였듯이 지금은 임금노예, 즉 임노동자인 셈이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다. 일을 못한다고 타박하면서 재벌사 가족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당신 월급에서 까요!” 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존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순간, 바로 해고될 것이고, 생존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 이 저런 생존권의 문제를 그대로 둘 때, 자발적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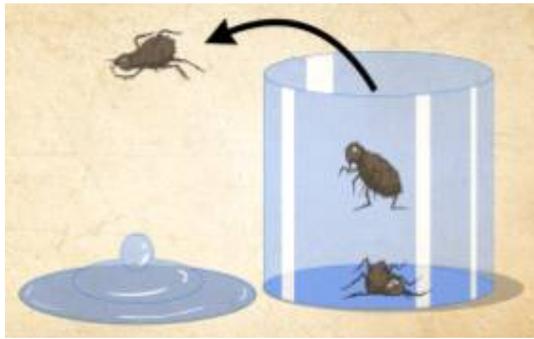
우리가 달을 보라는 놈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생각할 수 있는가, 좀 더 나아가서 보니 달달놈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생존권을 그대로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 즉 정치권력과 생존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생존권의 문제를 사회가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복지발달사에서 사회복지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수다가 그 다음에 차티즘운동으로 나에게도 자유권을 달라고 하다가 맨 나중에 사회권을 달라고 한다. 사회권은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어떠한 상황에도 보장받는 것을 권리로 보고 이것을 달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권없는 인권은 가능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

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즉 베버리지의 5대 악한 놈을 한 사회가 공동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권력을 가져야 한다.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까지가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사회권을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 벼룩이



벼룩이는 자기 몸보다 200배를 뛸 수 있다. 그런데 20배의 벼에 가두어 뛰게 하면 곧 적응한다. 이때 병뚜껑을 열면 여전히 20배만큼만 된다. 200배 뛰는 상상조차 못한다. 이제 그 통을 모든 것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산다. 이 벼룩이 중에서 병에서 뛰어 나오는 벼룩이가 생겨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것일까? 뛰어 나오는 벼룩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왕따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뛰다가 지쳐 쓰러졌거나 계속 적응하려고 하거나 그 중에 뛰어 나오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뛰어 나오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아이가 집에 가서 “훌륭한 강의를 들었는데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다. 그러는 순간 부모가 당황할 것이다. 그래서 튀어 나가도 데리고 와서 적응시키고 쓰러져도 적응시키려 해야 한다. 원래 뛸 수 있을 만큼의 큰 통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그 통을 문제삼아야 하고 인간이 아니라 통을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을 문제삼으면 사회문제가 되고 인간을 문제삼으면, 사례문제가 된다. 전자가 사회관리를 한다면 후자는 사례관리에 집중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

### 3. 사회권을 위한 근본적 질문: 닉부이치치의 경쟁인가 마서스비니어드섬의 연대인가

####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조림 캔을 따다가 손을 다쳤다면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라 말할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심하지!’ 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늦게 퇴근한 아버지는 ‘애를 좀 잘 돌보지’ 하고 핀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떨까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실제로 최근에 새로운 뚜껑을 가진 참치캔이 나온 것을 알고 있나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 나온 참치캔은 양철로 되어 있지 않고 종이처럼 구겨진다. 이 참치캔의 경우 뚜껑을 따다가 아무리 다치려고 하더라도 다칠 수가 없다. 이 경우 우리는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야단 맞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제 정리해 보자. <표 1>를 보면, 왼쪽의 경우는 위험이 아이와 가족의 책임이다. 오른쪽의 경우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왼쪽에서는 가족내에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아이/아빠/엄마가 서로 싸운다. 오른쪽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 자신들의 위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이처럼, 전자가 아이가 처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책임을 아이 자신과 가족에게 돌렸다면, 후자는 그 책임을 사회와 국가에게 물은 것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장애, 노령, 빈곤 등 수 많은 위험에 처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위험과 필요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누구에게 지워야 합니까? 개인(가족)인가요, 국가(사회)인가요?

〈표 1〉 위험에 대한 상이한 견해

위험은 개인이 책임이다	위험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얼마나 다쳤지? 애좀 잘 돌보지?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가족간 갈등	시민과 사회, 시민과 정부 간의 갈등

생각해 보면,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보자. 건널목에서 노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개인적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요? 해답이 쉬워 보인다. 지하상가를 이용하지 않은 노인이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것을 반대해 왔다. 이것은 영업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노인의 사고를 노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첫째,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천적 장애인인 닉 부이치치는 장애를 극복한 전형이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도 하는데, 왜 비장애인이 못하는가, 그것은 게으르고 자조·자립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확률로 보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들어 다른 장애인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는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는 청각기능의 손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정착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장애가 된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듯이 수화를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장애가 아닐 것이다.

실제 미국 뉴잉글랜드 보스턴 남부에 있는 마서즈 비니러드라고 불리는 섬에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 요인과 한정된 집단내에서의 결혼으로 높은 청각장애인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웠고 실제 이 섬은 제2국어로 선택했다. 따라서 누구도 청각장애인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았다.

## 4. 사회권의 눈으로 본 인권: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공동체에 대한 상상)

**인권에 대한 질문, 민주화 이후에 더 불행해졌다?**

광주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택시기사가 뜬금없이 말을 걸었다. “민주화가 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에도 저의 삶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분의 얘기는 부분적으로 틀리고 또한 옳다. 예전에 직장은 군대의 병영과 비슷했다. 회사간부가 정문에서 바리깡을 들고 두발검사를 하고 노동자들은 조기출근하여 국민체조를 했으며, 노동자를 공돌이·공순이 혹은 산업전사라고 했으니 병영통제라고 할 만하다. 당시 시민들의 삶은 세끼 밥을 해결하기도 버거웠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적어도 오늘날 직장과 우리 삶은 이것보다는 나아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 판단은 오판일 수도 있다. 50%가 넘는 비정규직과 졸업 후 일자리를 못 찾는 60% 이상의 젊은이들, 100만 명의 폐지 줍는 노인들, 고용불안, 심화되는 양극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일관되게 1위인 지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과연 선뜻 말할 수 있을까.

흔히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권의 실현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위의 평등을 권리로 보장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항공사의 부사장과 사무장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민낯을 접하면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나아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부하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멸감을 느낀 사무장은 최근 산재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사무장은 부사장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한 것일까? 세 모녀가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인권이 존재할까? 인권은 ‘먹고사니즘’을 해결하지 못한 개인과 사회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사무장이 모멸적인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퇴사하면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세 모녀의 자살도 ‘먹고사니즘’의 공격에서 어떤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학자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질 나쁜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비평했다. 질 나쁜 민주주의는 폐지 줍는 노인, 세 모녀, 사무장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87년 민주화만으로는 인간다움의 삶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상, 양심, 언론, 출판 등의 자유권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유권은 중요한 권리다. 이것은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처음에 부르주아지가 봉건영주에 대항해서, 그 다음에 차티즘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얻은 권리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 가진 자들은 이 인권에 쉽게 접근했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과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경향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권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권의 상상, ‘먹고사니즘’으로부터의 탈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자유권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사회적·정치적 발언권은 ‘먹고사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산과 권력의 가진 소수였다. 특히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공황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먹고사니즘’의 노예가 되었다. 빈곤층은 말한다.

1) 이 부분은 <사회권의 상상, ‘먹고사니즘’의 탈피>(유범상, <인권> 2015.0708)에서 온 것임.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알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들은 자유권을 누릴 여유도 접근할 방법도 몰랐다. 이처럼 ‘먹고사니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는 것이다. ‘먹고사니즘’이 해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권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권이 주어진다 해도 도피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유권은 특권층의 인권막이가 될 수도 있다. ‘먹고사니즘’이 압도적인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과 자본의 힘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의 힘에 굴복한 국가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계발과 경쟁력을 키우면서 ‘각자도생’을 꿈꾼다.

사회권은 ‘먹고사니즘’이 만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현실비판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마셜은 사회권을 자본주의 경제의 계급불평등에 대한 수정이고 이를 통해 인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권은 어떻게 ‘먹고사니즘’을 극복했을까? 사회권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비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보자.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다.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장애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들 앞에선 그는 장애인이 아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장애를 느낀다.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청각의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일까?” 이처럼 사회권은 문제의 원인을 사회로 보았고 사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국민의 집’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설계도면을 그린다. 사회권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회의 결핍이다. 이 범주에는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등 인간지위를 보증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민의 집을 짓는데 큰 어려움이 따랐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핍을 없애기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소득보전 등을 위해 누군가가 돈을 내야 한다. 사회권의 상상은 모두가 돈을 내되, 차별적으로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그래서 사회권은 소득이전의 정치, 계급정치, 타협의 정치로 명명된다.

이처럼 ‘먹고사니즘’에 대한 집합적 대응이 사회권의 상상이고 이것을 실천한 이가 복지국가이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이상 권력과 시장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시민들 간의 불평등한 조건이 사라짐으로써 지위의 평등도 확보될 수 있었다. 시장과 권력에 주눅 들지 않음으로써 창의력, 자주성 그리고 참여도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 즉 시민들 간, 시민과 국가, 노동과 자본 간의 신뢰도도 증가했다. 사회적 자본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권은 ‘먹고사니즘’을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제거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사회권은 자유권을 최종적으로 실현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사상, 양심, 참여의 권리를 부여한 자유권은 사회권이 보장됨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었다.

생각해 본다. 한국에서 ‘먹고사니즘’의 문제가 이 정도로 해결되었다면, 사무장이 부사장의 부당한 명령 앞에서 더 자유롭게 않았을까. 그리고 세 모녀가 과연 자살을 했을까. 그렇다면 사회권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사회권의 실현,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를 죽인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돈을 빼앗아 간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남의 돈을 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하기는 불가능하다. 통상 그들이 모든 힘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부자로부터 일반시민들로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우선 ‘먹고사니즘’ 에 사로잡힌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 한다’ 라거나, ‘자본주의적 경쟁은 불가피하다’ 는 인식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사회권이 숨 쉴 수 없다. 서유럽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저임금과 계절적 실업, 노령과 장애로 인한 것에 동의했고, 불평등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상상이 바로 새로운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과 동기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을 인식한 자들이 힘을 가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아니라 설계회사와 시공회사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들은 조합장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성되면 원주민의 80%가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할 정도이다. 비유하자면 사회권을 실현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한 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합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건축과정에서 설계도면과 건축물을 보고 관철할 줄 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연대전략으로 가능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었다. 회사의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에 대해해 공통의 이익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했다. 교장노조, 판사노조, 군인노조, 경찰노조가 있을 정도로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조직화되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공장 밖으로 나와서는 토론하고 참여하는 시민들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독일을 정치시민의 집이라고 하고, 북유럽을 흔히 독서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로 부를 정도로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했다. 공장과 시민사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베버리지가 ‘결핍’ 으로 이야기했던 ‘먹고사니즘’ 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노령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처럼 복지국가는 사회권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조직된 힘으로 관철시키는 사회적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 대한 상상

시지프스는 신을 거역한 죄로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바위는 올리자마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시지프스는 의미 없는 노동을 무한반복 한다.

카뮈는 이런 시지프스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 절대자에 귀의 그리고 저항을 꼽는다. 자살이 자신의 의식을 죽인다면 귀의는 세상의 부조리를 신의 해결에 맡기면서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항은? 카뮈는 자각의 순간에 주목한다. 즉 동일한 노동을 수없이 반복하는 중에 시지프스가 바위를 다시 굴리기 위해 언덕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왜 이 부조리가 지속되고 있지? 왜 나는 이 형벌을 받아야 하지?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광주 택시 이야기로 되돌아 가보자. 택시기사는 민주주의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 밥 먹여 주니?!’ 라며 정치를 불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카뮈에 비유해 보면, 그가 그 민주주의가 형식에 그쳤고 그 민주주의로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저항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순간은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가 질 나쁜 것’ 이 된 원인을 따져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사회의 잔혹극이 지속되고 있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바다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는 이야기에 ‘토론 없는 애도, 비판 없는 애도’ 만을 하고 있다. 성장제일주의가 만든 질병과 무대책에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만 비난하는 사이 본질이 은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고립되고 있다.

인권은 고통스런 현실에 개입해 왔다. 불평등한 현실 앞에서 인권은 자신에 대한 정의조차 새롭게 했다. 자유권만으로 인권은 ‘먹고사니즘’ 과 발전주의 국가와 자본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 시지프스가 초기에 신을 문제 삼지 않듯이, 이제 ‘먹고사니즘’ 에 겁먹은 사이 나와 내가 사는 세상이 위험해지고 인권이 부차적으로 되는 현실의 이면을 문제 삼는 시지프스의 혜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사회권의 역사적 경험은 시지프스 홀로 ‘먹고사니즘’ 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언덕 너머로 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을 깨닫고 함께 할 동료들을 모아야 한다. 결핍이 인간의 삶과 상상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은 사회권에 대한 성찰과 사회권 실현이 가능한 조건, 즉 시지프스들이 함께 자각할 때 가능하다.

## 3강 후기

---

3강은 워크숍으로 1박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의 1,2강이 정책을 입안하는 입안자로서의 철학적 깊이를 세우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과 토론이 진행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버파크 호텔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기간 정책연구회에 함께 하시지 못했던 의원님들까지 함께 모이는 열린 모임으로 개최되어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열띤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토론의 화두는 사회권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인천의 사회복지 현실 등 다양한 주제들이 아우러져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토론 후 함께 뒤풀이를 통해 더 많은 속 깊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 참석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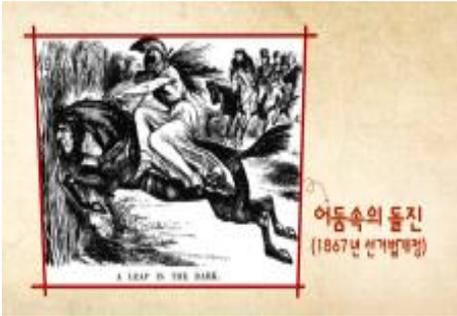
손 민 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 강 래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 종 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 준 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남 공 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노 태 손	의회운영위원장
민 경 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 성 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안 병 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 병 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용 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조 선 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 성 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본 워크숍은 열린 강좌로 준비되어 정책연구회 참여 의원님들을 비롯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중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4강. 철학은 어떻게 정책이 되는가?

### 1. 비버리지 보고서와 전후합의

#### 선거법 개정



183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때 대상자는 부르주아지(산업자본가와 중간 시민층)이었고, 대략 5%미만의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들만 재산에 따라 이들만 가진 선거권을 노동자들에게도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 1830년대의 차티즘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실들이 1867년에 제2차 선거법 개정으로 도시의 공장남성노동자까지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것을 풍자한 그림이 <어둠속의 돌진>이다. 이 개정으로 유권자 비율이 9%로 오른다.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향해 돌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1886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행진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며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달라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기본적인 노동권을 요구했으나, 철저히 탄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90년에 행진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메이데이(May Day)이다. 왼쪽은 1890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90년은 100주년을 기념하면 만든 기념우표다.

노동절은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로 인한 것인데, 미국의 노동절은 언제일까. 당연히 5월 1일이어야 하는데, 9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미국의 지배자들이 메이데이 투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5월 1일은 준법의 날로 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절은 5월 1일이지만, 이전에는 3월 10일이었다. 어용노조였던 대한노총이 창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886년에 TUC(Trade Union Congress), 즉 영국의 총연합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당을 만드는데 간여해서 노동당이 창립된다.

#### 자유당과 보수당

케어 하디라는 사람으로 탄광노동자이고, 학교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노동당 최초 수상이 된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8명 중 3명만 살아남는다. 하디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만든 것이 독립노동당을 만든다. 독립노동당은 이후 노동당 창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자유당과 보수당이다. 보수당은 토리당이라고 하고 귀족들이 중심이 된다. 자유당은 부르주아지들이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이 나타난다. 노동당은 페이비언 소사이어티나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다. 초기에 노동조합의 가장 큰 노조인 NUM(national union of mine workers), 즉 탄광노조는 초기에는 자유당을 지지하지만 곧 노동당으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1930-4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당이 소멸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창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가입을 하면서 당원들의 98%가 조합원들이었고 당운영비의 대부분을 노동조합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당의 몸통은 노동조합이고, 노동당의 머리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이며, 심장은 하디의 독립노동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당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한다. 서서히 자유당으로부터 노동당으로 권력의 축이 이동되면서, 3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두 번 연립정부에 참여를 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 시기에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했다. 1945년 전쟁종료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비로소 단권집권에 성공한다.

### 사회보장 도입-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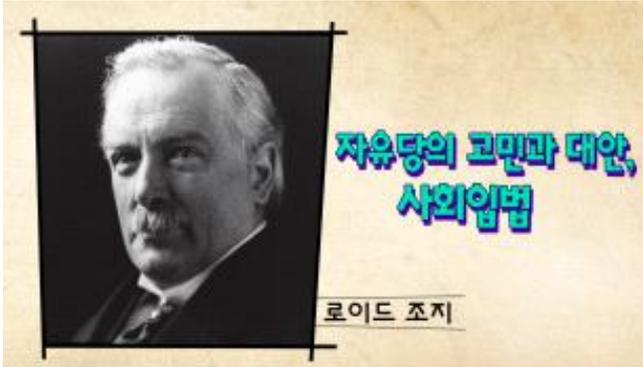
최초로 보편적 복지에 준할 만큼 제도를 도입한 것이 독일이다. 1883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이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최초의 총리이고, 철혈제상이었다. 왜 철혈제상이냐? 1862년 프로이센 주의회가 빌헬름 1세의 군비확장 법안 승인을 거부하자 그가 임명되고 그는 국회에서 연설한다. 이 연설 때문에 그는 철혈제상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독일에서의 프로이센의 지위는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닌 프로이센의 권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오 ... 작금의 거대한 문제 앞에 이루어져야 할 결단은, 1848년과 1849년에 이미 범하였던 거대한 실수인 연설과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외다.”

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왜 그랬을까.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의 유혹의 피리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고 생각했다. 당시 독일은 산업화의 후발주자인데,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 비스마르크가 집권해서 보니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독일의 시민들이 사회주의의 피리부는 자들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들의 유혹으로부터 독일을 지켜야한다고 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 복지의 제도는 이런 배경에서 군국주의자에 의해 도입되었다. 즉 기본적인 정서가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야 한다는 책임을 갖는 온정적 가부장제인 것이다. 다른 한편,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이 독일의 성장을 이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보자. 독일의 참모총장이 아동노동을 금지하자고 제안한다. 왜 그러는가? 독일이 군국주의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울 때, 너무 탄광에서 일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노동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황제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사회보장 개혁-자유당



사회복지역사를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복지국가의 건설 주체로 비스마르크처럼 진보주의자들보다는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자유당이 보수당과 다른 입장들을 가져야 하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이 치고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노동당이 만 들어졌다. 사면초가에 있는 것이다.

즉 진보정당이 생겨서 초기엔 우습게 여겼는데,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하자, 자유당이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보수당 또한 어느 정도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로이드 조지는 1906년에 자유당이 집권할 때, 당시 재무상이었다. 그는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이야기를 쫓아다니며 듣고 공부했다. 당시 보수당이 복지제도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니 상원의원(귀족들)에게 “500명의 실업자들을 뽑아서 상원의원을 만들겠다”고 협박도 하고, 상원개혁도 하고 상당히 급진적이고 담대한 개혁을 제안 하면서 1906년부터 영국의 복지국가의 법안이 만들기 시작했다.

로이드 조지 정부의 개혁은 자유당이다 보니 COS 등 자선조직협회가 복지를 주는 제한적인 것들을 넘어서지 못했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빈민들을 선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상상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 전쟁과 베버리지 리포트



2차 세계대전은 자유당과 노동당과 보수당이 함께 파시스트에 저항해야 하는 연립정부를 형성하도록 했다. 연립정부의 수상은 처칠이었다. 이 전쟁을 통해 시민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다. 첫째, 전쟁 중에 더 잘 먹게 되었다. 빈곤이었을 때, 빈부격차기 심해서 부자들은 잘 먹었지만 노동자의 아이들은, 하디만 하여도 형제가 5명이 변을 당했고, 여전히 아동노동이 성행했다. 전쟁기간 중에 배급제는 평등을 경험하는 계기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이 경험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둘째, 예전에 평민은 귀족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런데 전쟁은 평민과 귀족의 형제애를 만들었다. 똑같이 전투에 임하면서 형제, 동지 등의 평등을 체험한다.

셋째, 전쟁에서 노동조합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가 전쟁물자를 만든다거나, 당시에 수송을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의료적인 처리를 하거나 등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 전국민의료보험, 즉 NHS를 주도한다. 영국인에게 가장 존경한 집단은 누구인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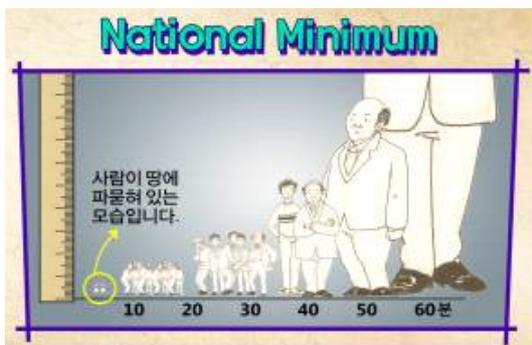
있더니 압도적으로 노동조합이 1위가 나왔다. 전쟁의 경험 속에서 노동조합이 인정을 받게 되고 집합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전쟁중에 연립정부는 전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처칠은 11개의 내각에 지시를 내린다. 11개 부처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면서 대응기구를 만들면서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하게 되는데 초대된 이가 베버리지다. 드디어 1942년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일명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전에는 주로 문제가 있으면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악은 다섯 명의 거인이다. 결핍, 무지, 질병, 불결 그리고 무위다. 이 다섯 거인이 시민들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쟁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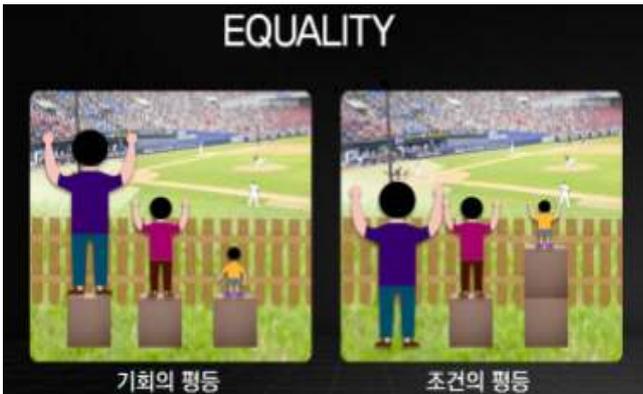
처칠은 전쟁 직후 바로 선거를 실시했다. 그는 전쟁 영웅인 자신이 당선될 줄 알았다. 하지만, 600명의 의석 중 384석을 획득한 노동당이 단독으로 집권을 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긴 것이다. 노동당은 5명의 거인을 막기 위해 복지국가의 정책을 실천했다. 복지국가의 원칙으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막아줘야 한다는 정도의 국민기본선이 다. 생활에 있어서 기본선을 정하는 것이다.



얀센이라는 학자가 소득에 따라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줄 세워보았다. 이때 평균이 1m 70인데, 1m가 상당히 많았다. 이처럼 국민기본선에서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먹고 살고, 의식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을 맞춰주는 것이다. 소수파 보고서와 베버리지 보고서가 national minimum을 전후에 실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national minimum을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한쪽에서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5거인인 주거, 교육, 의료 등이다. 이것이 탈상품(de-comodification)인데, 한마디로 상품영역에서 이탈된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계층화(stratification)를 줄이고자 했다. 즉 시민들간의 계층적인 수준은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이 탈상품화의 수준은 높이고, 계층화의 수준은 낮추려고 하는 이상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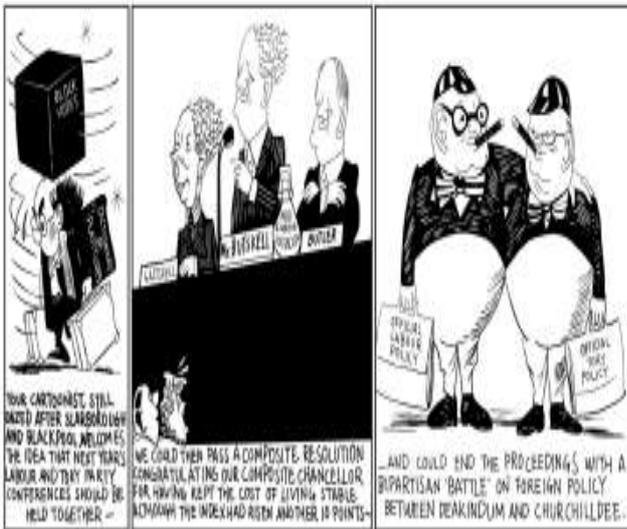
베버리지 레포트는 나름대로 national minimum 로 탈상품화의 수준은 적절히 높였지만, 계층화에는 개입하지 못했다. 북유럽 복지국가가 이 계층화의 수준을 낮추는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상상 협회가 베버리지 레포트를 통해서 탈상품화를 하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복지국가가 진전되면서 시민들끼리 서로 부러워하거나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계층화를 낮추려고 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계층화는 평등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 왼쪽 그림의 왼쪽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야구장에 가게 되면 야구장 측에서 담장이 있으니 발 받침대를 하나씩 가져가라고 한다. 다들 야구를 볼 기회를 준 것이다.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가봤더니 작은 아이는 보지 못하고 큰 아이는 너무 잘 볼 수 있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야구장 가서 이것을 관람할 기회를 모두 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키가 다르다. 즉 조건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림의 오른쪽처럼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한다. 이것이 조건의 평등이다. 보편적 복지는 조건의 평등을 줌으로써, 즉 계층화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내가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던지 간에 조건, 출발선을 같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조건의 평등은 힘 관계들 속에서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힘센 사람의 것을 힘 약한 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 전후합의-버츠크리즘



전후에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었다. 시대가 바뀐 것인데,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보수당은 고민했다. 예전의 토리당은 온정적인 가부장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수당의 정책을 봤더니 거의 노동당과 비슷해졌다. 왼쪽 그림을 보면 ‘welcomes the idea that next year’s labour and tory party conferences should be together’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다음 해에 노동당과 토리당의 커퍼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그들은 서로 이질적인 정책들을 한 곳에 두고 합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림의 가운데 섹션에서 왼쪽에 가이츠켈이고 오른쪽이 버틀러다. 가운데 사람은 버틀러와 가이츠켈을 합친 사람이다. 버츠크리즘을 표현한 것이다. 테이블 위의 병은 ‘milk and water socialism’, 즉 우유에 물을 넣은 것이다. 즉 이들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당조차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1945년도 복지국가부터 대처가 등장하는 79년까지는 보수당이 집권을 하던 노동당이 집권을 하던 비슷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림의 오른쪽 섹션은 이제는 외교정책까지도 비슷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2. 복지국가에 대한 총공세: 하이에크와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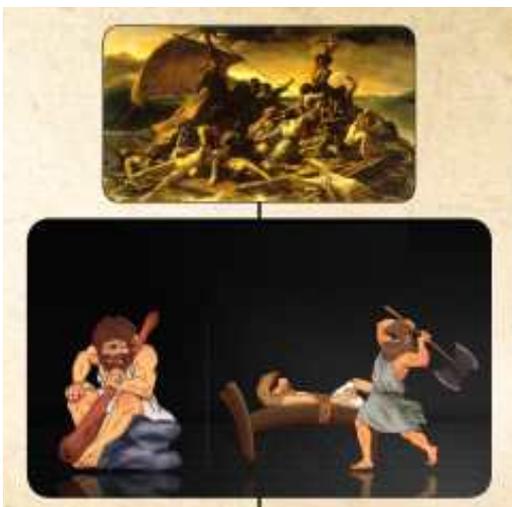
### 이념



자본주의 등장 이후 크게 네 가지 길이 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윤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 이 맥락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주장한다. 그림의 1번 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이행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폭력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길에서는 혁명을 만나게 된다. 혁명을 만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2번 길이다. 선거나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길이다. 볼리비아의 차베스가 자신이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그런 길이라고 했지만 도중에 암으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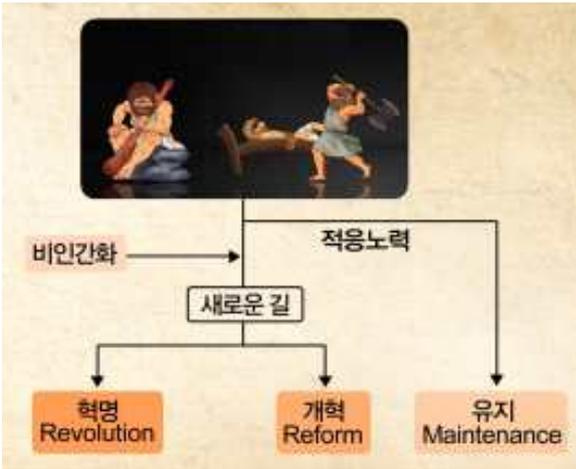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3번 길이다. 건물주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통해 번 돈을 세금을 통해 사회복지로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3번 길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것이 하이에크와 대처, 그리고 레이건이다. 이것은 사회타격을 가르치고, 게으름과 의존성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4번 길은 시장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과도한 경쟁과 심각한 불평등을 만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은 정의와 사회에 대한 일관된 신념체계이다.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은 자본주의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배가 좌초되었을 때, 당시의 상류층의 사람들, 부르주아지나 고급군인들은 구명정에 올라 타는데, 대부분의 수병이나 식민지 개척을 위해 떠난 시민들은 뗏목에 올라탄다.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은 모두 살고, 뗏목에 오른 사람은 10여명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정신병에 걸린다. 표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배고픔으로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다.

자본주의는 어쩌면 구명정에 있는 사람과 뗏목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뗏목에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닌가로 비유될 수 있다.

하단의 그림에서 뗏목에 있는 사람들은 프르크루스테스 침대위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스 로마신화에 보면 그 침대위에 있는 사람은 침대위에 자신의 몸을 맞추어야 살아남는다. 산적 프르크루스테스는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눕혀 잘라 죽이고, 작은 사람은 큰 침대에 눕혀 늘려 죽인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을 침대에 맞춘다. 반면 퀴클롭스는 눈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은 세상을 이윤의 관점에서 본다. 뗏목의 사람은 침대위의 사람들로 노동자를 상징하고 구멍정에 있는 사람은 이윤의 눈으로 쳐다본 퀴클롭스 괴물과 같은 것은 아닐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 대한 시선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1, 2번 길로 혁명의 길이고, 두 번째, 3번의 길로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수정하는 개혁의 길이다.

마지막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때 발생하는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을 선별적 복지나 자선을 통해 해소하는 현상유지의 길이다.

### 복지국가의 위기

보편적 복지국가의 수정자본주의는 핵심이 소득이전이다. 그런데 잘나가던 복지국가가 왜 70년대에 위기가 왔을까? 제일 문제는 70년대가 되니 40-50년대 전쟁이후 가파른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저성장의 시대가 나타나자 완전고용과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오일 쇼크이다. 유류파동으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카다피는 싼 가격에 오일을 서방에 팔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일은 폭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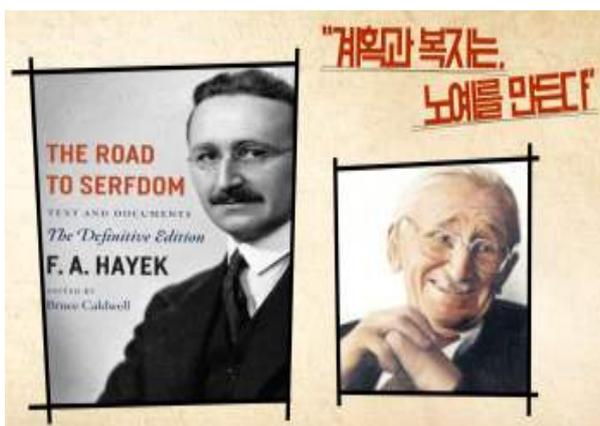


이제 이전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불황이 오면 물건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호황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불황이 왔는데도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오일 때문에 물건가격이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른 것이다. 저성장에 인플레이션이 되니 가장 힘든 것이 노동자들이었다. 그래서 노조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 입장에서 살기 힘들데 파업을 하니, 전후 복지국가를 이끌었던 세력이 노조였는데 사람들은 노조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던 중에, 대처가 나타나서 기존의 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복지국가는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제기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1944년에 노예의 길을 발표한다. 한마디로 ‘탓탓하지 말라. 문제의 원인은 너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니다. 남탓하게 되면 노예가 된다’ 는 것이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 이는 개인적인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하이에크는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겪는다. 고통을 경험하면서 보았던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은 치명적 자만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 자만이다. 치명적 자만에 맡기면 반드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로 간다고 생각했다. 1944년대는 베버리지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할 때인데, 하이에크는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하이에크가 따뜻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상가가 나름 옳다고 하는 것을 시대에 역행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하이에크는 몽페를랭이라는 학회를 만든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한동안 칩거했지만, 드디어 대처와 레이건을 만나면서 인생역전을 이룬다. 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이제 하이에크를 알아주게 되었고 그는 결국 노벨경제학상까지 받게 된다.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에 있으면 안된다. 따라서 계획을 하면 안되지만, 혹 계획을 할지라도 경쟁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 즉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쟁을 잘 시키기 위한 계획이야 한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복지국가가 계획을 주장하지만 치명적 오만이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 대처

하이에크 책을 알아보는 자가 나타난다. 영국의 수상 대처다. 대처는 항상 가방에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제시했다. 특히 대처는 하이에크 말년의 생일에 ‘위기에 빠진, 질병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국을 당신의 사상이 살렸다’ 며 하이에크에게 편지를 보냈다.



대처는 기본적으로 영국사람들의 정신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정신은 복지병(British disease)에 걸려있는데, 의존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모든 영국인은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것을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니 돈 버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우습

게 여긴다고 대처는 비판했다. 이런 경향이 지금 영국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처의 주장이다. 대처는 자선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인들이 경쟁을 통해 돈을 벌고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번 사람들의 자선을 베풀도록 하자는 것이 대처의 주장이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인두세이다.



이전에 세금은 재산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를 통해 소득이전을 했는데, 대처는 이런 세금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니 돈 버는 것을 마치 죄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대처는 인두세를 제기했다. 예전에 두 사람이 세배의 큰 집에서 살면 3:1로 냈다.

하지만 인두세는 재산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수로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이제 작은 집에 사는 빈곤층이 큰 집에 사는 부유층보다도 머리수대로 세금을 매기게 되니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다. 대처는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킨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이니 사회타을 하지 말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 대안은 너와 너의 가족이다. 왜 자꾸 사회타을 하는가 하는 것이 'there is no alternative' 어떤 대안도 없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줄여서 TINA라고 하는데 이를 관철시킨다.



어떤 철학이 정책이 되려면 이것을 관철시키는 힘, 즉 세력이 있어야 한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철학은 아주 간단하다. 타트이다. 남타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있고, 노력의 대가를 사회는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 인두세이다. 핵심은 어디에다 맡겨야 하는가 하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복지국가를 경유하면서 만들었던 공공영역의 자산을 전부 팔아버린다. 가스, 철도, 전기 등이 이때 모두 시장으로 매매되었다.

이렇게 전기, 교육 등이 민영화되었고, 노동시장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변모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처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설계도면을 그렸더라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영국의 시민들은 소수파보고서와 베버리지가 만든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교육받고 복지국의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대처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세력화

대처는 매우 용의주도했다. 저 세력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핑장히 노력했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볼 때, 목요일클럽(Thursday Club)이라고 있다. 스웨덴의 에를란데르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사지도부와 식사를 하면 대화를 28년 동안 했다. 이것이 목요일클럽이다. 대처도 그런 클럽이 있다.

대처의 클럽도 목요일마다 만난다. 그런데 자기 측근들만 만난다. 인너써클(inner circle)인 자기 참모들과 목요일 아침마다 회의하고 결정을 한다. 그리고 각료회의에 나가서 공표한다. 이처럼 대처의 정치는 대단히 사당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어떻게 그런 힘들을 가지고 정책을 관철할 수가 있었을까? 대처는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세력을 만든다. 공기업을 매각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주식을 갖게 된다. 주식을 가지게 되면 주식하락을 염려해서 대처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공공주택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를 다 팔아버린다. 주택 가격을 할인해서 40% 정도에 매각했다. 사람들이 주택이 생기니 그들 또한 대처를 지지했다. 주식과 주택을 가진 시민들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이점으로 되돌아 갈 것을 염려하여 대처를 일관되게 지지했던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처는 민주적인 정치라기보다 이권정치를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조를 파편화시킨다. 대처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8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3자 개입금지’이다. 노조간부가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전문가는 3자인데, 둘 다 구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당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했는데 청구를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대처가 있는 동안에 노조 파업이 85%나 줄어들었다. 노조 조합원도 30%가 줄었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시 영국에서 제일 힘이 센 노조가 NUM, 즉 탄광노조인데, 대처는 이 노조를 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경제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 대처는 1년 반 동안 쓸 석탄을 비축한다. 대처가 탄광노조를 치자 탄광노조는 파업을 했지만, 석탄의 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탄광노조는 1년만에 무너진다. 이렇게 세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더불어 복지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처는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영국시민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이 서쪽 마녀를 죽이는데, 그때 ‘마녀 잘 죽었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대처 사망에서 부른 것이다. 물론 대처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대처는 죽기 전에 “지금에 와서 보니 인두세 정책 등 후회하는 것은 없냐”는 인터뷰에서 “내 정책을 그대로 갔으면 위대한 영국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대처는 그 나름대로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였다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하게 된다. 레이건도 동일한 정책의 궤도들 속에서 대처와 함께 하는데, 레이건이 집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민영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세계화 등이 진전되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끝났을 때 의료보험은 더더욱 심각해졌다.

대처는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다른 것은 동의를 했는지 몰라도 의료보험은 건들지 못하게 했다. 틀을 건들지 못했지만 임신으로 병원진료를 10회에서 진료비가 더 줄어드는 방식, 그리고 땅은 팔게 하고 건물은 못팔게 한다든가의 방식으로 의료보험이 허물어지기는 했다. 대처부터 병원에서 줄서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국가가 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면을 보면 그것은 대처이후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한번도 공공의료가 되어본 적이 없다. 영화 <식코>에서 애덤스는 미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5,000명 중의 한명인데, 사고를 당하니 찢어진 곳을 직접 꿰맨다. 미국의 빈곤층은 의료보험이 안되니 이가 썩으면 다 뽑아 버리는 현상도 흔하게 나타난다.

비판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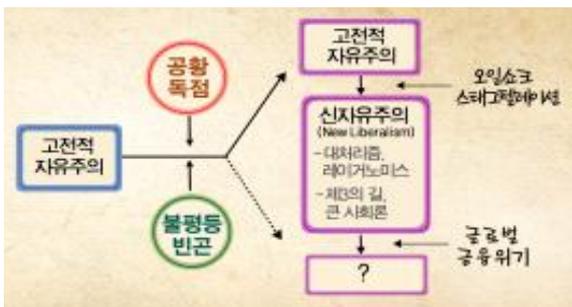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촘스키이다. 그의 책 <그들에게는 국민은 없다>는 대처에게 국민이 안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함축한다.

대처나 레이건의 정치를 ‘두 국민 전략’ 이라고 한다.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국민은 잘 사는 자와 못사는 자로 두 국민으로 나뉜다.

대처의 내각에서 중요했던 사람의 대부분은 자수성가형 정치인들이다. 대처 본인도 그러했다. 의존하는 사람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나처럼 되는데 저들은 노력하지 않고 왜 저러는가. 촘스키에 반하는 하이에크 급의 또 다른 이론가는 프리드먼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자유라는 것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고플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굶지 않게 주는데, “시장이나 자유주의를 보라. 빵을 팔 때 흑인이라고 안파느냐, 사회주의자라고 안파느냐, 이처럼 시장만큼은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그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적인 체제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체제 비판의 문건을 발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돈만 주면 용지도 인색해주고 책도 발행해주고 이런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프리드먼은 모두 자기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제3의 길과 큰 사회론

흐름



복지국가의 전개를 알아보자.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공황과 독점, 불평등과 빈곤이 생겨났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복지국가는 버츠크리즘에서 보듯이 전후합의였다. 하지만 70년대 들어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공격을 받았고, 특히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인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가 등장했다.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도 장기집권을 했다. 이때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블레어 정부가 등장한다. 제3의 길의 노동당 정부는 12년의 장기집권을 한다.

제3의 길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왼쪽 그림에 목이 두 개있는 사람이 있다. 오른 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이다. 즉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품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다. 즉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는다. 의료가 무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치료행위는 상품이 아니다. 즉 상품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상품화가 commodification이고, 접두어 de는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de-commodification은 탈상품화, 즉 상품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오른쪽은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의료, 주택, 교육 등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에 대해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다.

그림의 왼손은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계층화(stratification)이다. 이것은 계층들 간의 차이의 정도를 의미한다. 복지국가 이야기 할 때는 시민들간의 격차는 줄이면서 탈상품화는 높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탈상품화의 수준을 낮추고 개인 경쟁력에 의존하다가 보니 계층화의 수준은 높아진다.



탈상품화와 관련하여 세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상품화는 신자유주의가 탈상품화는 사회민주주의, 즉 복지국가가 선호한다. 그런데 제3의 길은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이다. 상품으로 쓸모가 없어진 것을 다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조선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퇴직을 한 노동자가 있다고 하자. 이제 그에게 용접기술은 조선소 외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그는 퇴직금으로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나 용접기술은 전원생활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는 원예농업, 즉 꽃 재배를 배워서 살고자 한다. 자신을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이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재상품화해주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즉 일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재교육, 직업훈련, 직업을 갖기 위한 제반 장비를 해 주고자 한다. 이처럼 재상품화의 제3의 길은 상품화의 신자유주의나 탈상품화의 사회민주주의와 다르다.

한편 큰 사회론(Big Society)은 재상품화든 탈상품화든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큰 사회론은 국가와 시장에 묻지 말고 사회, 즉 마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블레어와 제3의 길

블레어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때 교육은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이다. <피노키오>에서 보면 제페토가 피노키오에게 학교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한다. 블레어도 시급한 정치적 과제가 교육, 교육,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은 직업교육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우리는 복지를 주긴 주는데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웰페어(welfare)가 아니라 워크페어(workfare)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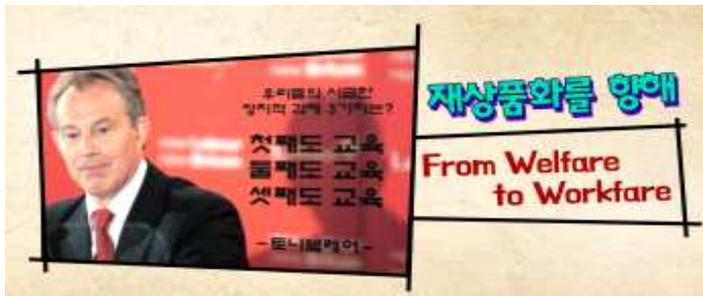
워크페어는 일을 위한 복지로도 번역되는데, 이 입장을 블레어는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에 가까울 수 있다. 재상품화도 어차피 상품화이기 때문이다.

블레어는 자신의 정당을 신노동당(New Labor)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노동당이 아니라. 신노동당인데, 당명 개정까지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의 상징들을 바꾸기 시작한다.

오른 쪽 그림을 보면 바탕이 흰색바탕이다. 예전에는 붉은색 바탕이었다. 붉은 색을 지우고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두었다. 여기에서 ‘당헌 4조 Out’ 은 노동당의 상징이다. 노동당이 1918년도 당헌 4조 즉,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당의 목표로 삼는다’ 는 것을 넣었다.



공적소유로 전환하기는 하는데 혁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에 기반해서 가겠다는 것이 영국식 사회주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케인즈주의적인 완전고용을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기본적인 전제가 노동자주의(laborism)인데, 이것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당헌 4조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노동당의 상징이다.

‘너 누구야?’ ‘우리는 당헌 4조다’ ‘우리는 근본적인 꿈을 만들어가는 정당이야’

이런 정도의 상징이었고 누구도 이 상징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를 과감하게 폐지한 사람이 토니 블레어다. 토니 블레어가 또 폐지한 것이 있다. 집단투표(block voting)이다. 노동당에서 노동조합이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한 사례가 집단투표제도이다. 예를 들면 A라는 노조에서 100명의 노조원이 있는데,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면 실제 반영될 때는 모두 찬성이 된다. 즉 그 노조의 표는 노동당에서 100표가 다 찬성으로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 리더들이 힘이 세진다. 토니 블레어는 이 제도를 없애면서 그냥 60대 40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음에 노동당의 색깔을 빼버리면서 한편에서는 워크페어로 간 것이 토니블레어다. 이것이 제3의 길이였다.



결론적으로 제3의 길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대처에 가깝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예전에 복지합의를 노동당 재무장관 버틀러와 보수당 재무장관 가이즈켈을 합해서 버츠헤리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블레처리즘으로 불린다. 이는 토니블레어와 대처와의 합성어이다. 버츠헤리즘에서 블레처리즘으로 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3의 길은 큰 범주에서 대처의 그늘아래 있다고 보면 된다.

## 나, 다니엘 브레이크

제3의 길의 정책이 만들어낸 영국의 슬픈 자화상이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다. 다니엘이 심장병에 걸려서 의사가 쉴 것을 권한다. 그래서 질병수당을 받으러 가니 일할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린다.



그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수당이 나온다. 수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질병수당을 다시 청구하는 항고에 매달리다 항고하는 날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항고과정이 오래 걸렸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상품화에 기반한 일을 위한 복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이 자체가 많은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고발하는 영화일 수 있다. 영화에서 눈여겨 볼 것은 ‘나는 너희들이 심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다. 나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이다’ 라는 그의 절규이다: "나는 한명의 시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 사기꾼, 거지, 도둑도 아니며,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내용들 하나하나에 영국 시민들이 복지국가가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상품으로 취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대상이 되고,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환자로서 취급받았는지를 나온다. 그래도 다니엘은 복지국가 시기에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3의 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잃을 것을 요구하는데, 나는 다니엘브레이크고 나는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토니블레어를 보고 그는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좌파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찢던 정책들의 내용들과 그가 옹호했던 가치는 대체로 우파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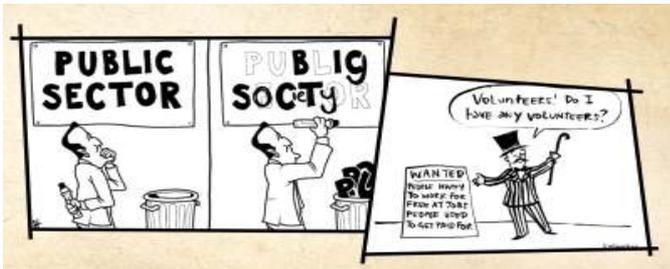
## 케머론과 큰 사회론

토니블레어 정책은 그다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블레어의 노동당이 12년 간 집권한다. 보수당보다는 그래도 제3의 길의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제 보수당은 고민에 빠진다. 그렇다고 흘러간 대처를 다시 이야기할 수 없다. 결국 보수당에서는 토니블레어보다 더 젊은 옥스퍼드를 나온 그리고 상당히 연설을 매력적으로 하는 인물을 내세우는데 그가 데이비드 케머론이다. 그는 “우리가 역사에서 하나 빠트린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다. 복지국가를 논의할 때,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사회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계속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와 시장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브로큰 소사이어티(broken society), 깨어진 사회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주장한다. ‘not state, but society’ (국가가 아니라 사회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고 마을이 책임지라고 주장한다.

그의 핵심적인 논지는 사회가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큰 사회가 되는데 원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있다. 그 큰 사회를 만드는데 원조하는 것은 사회활동을 키워내는 것, 마을만들기의 활동가지원시스템을 하는 것, 그리고 마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한데, 그때, 그 돈은 국가가 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빅 소사이어티 बैं크(big society bank, 큰사회은행)라고 해서 기존 은행에게 출자금을 모으라는 것이다. 그 출자금은 은행들 중에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휴면 계좌에서 모으라는 것인데, 이것을 내면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한편, 케머론 정부는 복지비를 계속 축소시켜나갔다. 겉 포장지는 큰 마을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점에서 빅소사이어티는 보수주의자들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마을만들기는 것은 그 자체로 좋으나 나쁘냐 할 수 없다. 어떤 마을만들기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현재 한국의 마을만들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을은 케머론의 마을만들기인가, 아니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즉 베버리지가 제시한 5대약의 제거를 통해 national minimum을 도입하려는 ‘강한 마을’ 만들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한 마을은 1950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을 만들기였다.



케머론은 마을만들기의 맥락에서 제3섹터를 이야기한다. 그는 시장이라는 섹터가 있고 퍼블릭이라는 섹터가 있는데 시민들이 퍼블릭 섹터, 즉 제3섹터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해 자신을 책임지라고 말한다.

왼쪽의 그림은 이런 케머론의 정책을 비판한다.

“Volunteers! Do I have any volunteer?” 즉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인데 내가 어떤 자원봉사자를 선호하지? wanted라고 되어 있는데 돈주지 않고 일하게 되는 자원봉사자 아닌가? 라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만들기 할 때, 공공섹터에서 볼он티어를 모집하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전략인 것이다.

토니블레어에서 데이비드 케머론으로 왔는데, 케머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대처다. 대처리즘은 아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처의 보완적인 실천들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 4강 후기

---

지난 워크숍에 이어 복지국가와 사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들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부터, 큰 틀에서의 한국사회의 사회권의 보장에 대한 평가 및 토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보다 앞서 사회권을 보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자치의 근본 화두인 주민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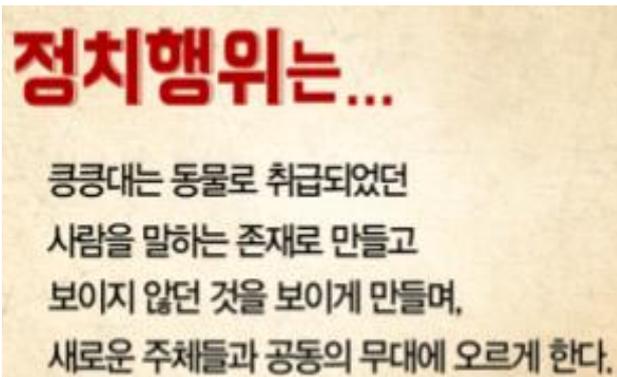
또한 지방자치제와 사회 활동가들이 꾸려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등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평가의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 ▷ 참석 의원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준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	
민경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 5강.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토론하는 시민들의 광장의 형성

말하는 존재, 호모 폴리틱우스



우리는 왜 권력을 가져야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쾡쾡대는 동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깨닫는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혼자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새로운 주체들과 공동의 무대에 올라서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대에서 박수 칠 생각만 했지 무대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쾡쾡대는 동물에서 말하는 존재가 되어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행위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모 폴리틱우스라고 규정했다.

호모 폴리틱우스는 자기 관점을 갖는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 적어도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 내 생각이 그대로 조건을 만들 제도나 정책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모여 작성한다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호모 폴리틱우스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이 권력은 동료들과 토론하고 연대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호모 폴리틱우스는 토론하는 동료들, 즉 세력들과 함께 자신의 철학을 정책이나, 제도로 관철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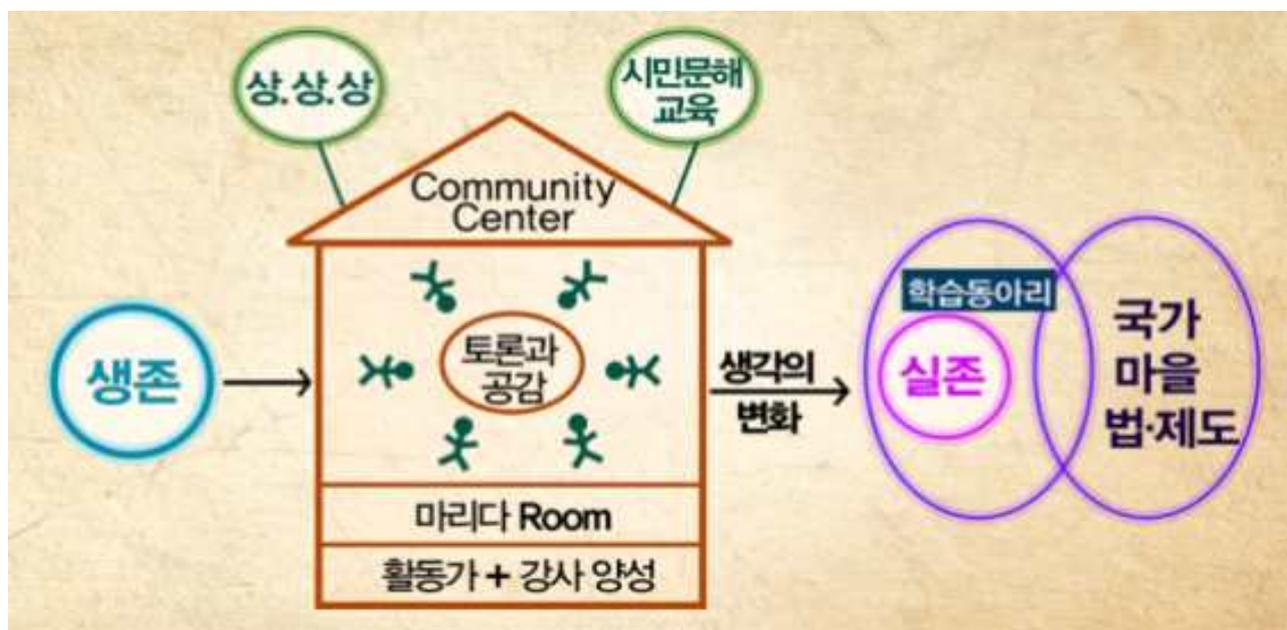
커뮤니티 센터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



공동의 무대에 오를 인식이나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교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 도서관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을일 수도 있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취약계층(클라이언트)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마을은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 호모 폴리틱우스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나는 가정, 학교, 복지관 등을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이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내 아이들도 시민이라는 것,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 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나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 그렇게 된 나는 끊임없이 그 광장을 매개하는 매개자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생존만을 위해 사는 나는 호모 커뮤니티센터에서 호모 폴리틱스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공감해야 한다. 토론과 공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권리를 자각하고 그 권리를 실천하는 것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시민 문해교육이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 센터는 시민문해교육의 실험실인 것이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수적인 것은 매개자이다. 매개자는 활동가, 강사들이다. 이 활동가와 강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개자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에서 모여 있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실존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 묻고 변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실존이다. 이 사람들은 혼자여서는 안되고 함께 해야 한다. 이때 학습동아리가 중요한 토론과 공감의 광장이다. 북유럽에서는 학습동아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사회 도처에서 기초적인 요소로 존재한다. 이런 사회를 학습동아리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토론들이 국가, 법, 마을, 제도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커뮤니티 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속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그 속에서 머무르면 안되고 나와서 실존을 자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들을 해야 하는데, 동물로 보면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공감합시다’ 하는 과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마을을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문해교육은 자신이 말하는 존재인 호모 폴리쿠스라는 자각의 과정이다. 자각의 핵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당하게 만든 그 놈을 문제삼는 것이다. 즉 달을 보라는 달달놈이다.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그 놈, 달달놈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왈쩌(Walzer)는 사람이 비판적 거리둠(critical distance)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조합이 노동자 일반을 위한 것인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 때가 있다. 즉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권력과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본질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즉 권력(이익)으로부터는 떨어지되, 공동체에 긴박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판적 거리둠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센 권력이 자본이다. 자본으로부터 떨어지되 인간의 권리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마리다



〈그리스도가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주방〉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다. 앞에서 후추를 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르다는 작은 방에 있는 마리아의 언니이다. 두 자매가 마리아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이다. 예수를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 마리아가 가서 듣고 있다.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한다. 반면에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의미만 묻는다. 의미만 묻는 사람이 좋은가, 일만하는 사람이 좋은가. 마리다는 창조된 인물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합성해서 만든 인간형이다. 마리다는 끊임없이 의미를 묻으면서 일을 한다.

마리다는 의미를 물으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실천한다. 이런 실천이 프락시스(praxis)이다. 커뮤니티 센터는 기본적으로 마리다의 방이 있어야 한다. 마리다의 방들 속에서 강사도 있고 학습도 하고 테이블에 모여 토론도 해야 한다.

마리다는 자각하고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이 대화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없다. 마리다는 대상을 보고 선생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도 이야기한다. 이때 선생은 학생이 되고 학생은 선생이 된다. 따라서 선생의 학생들, 선생의 지적인 노예가 되지 않고, 선생들과 학생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마리다들의 대화법이다. 이 대화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가’ 마리다는 AC를 알고, ‘나’ 마리다는 CB를 안다. 그래서 둘은 C를 공통으로 알고 있다. 그런 다음에 너가 먼저 이야기를 해봐, 이야기를 하는데 AC를 아는 ‘가’ 마리다가 이야기하면 ‘나’ 마리다가 CB가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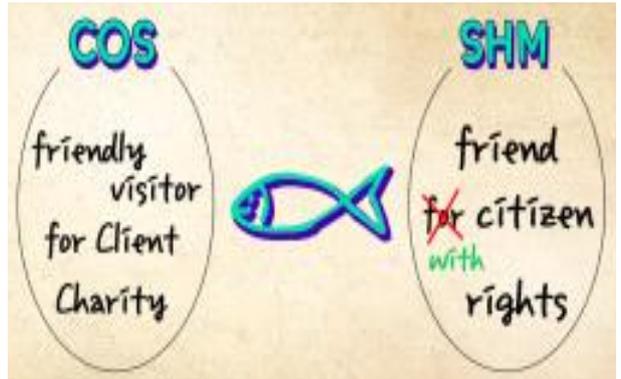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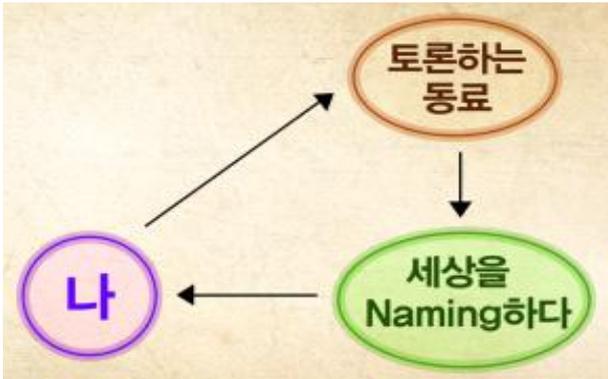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해봐, ‘나’ 마리다가 이야기하면 ‘가’ 마리다의 AC도 넓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상대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는다. 상대에게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한다. 따라서 이런 토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서로에게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동료가 된다.

토론하는 동료들은 함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함께 이름을 짓는다. ‘달달눔’ 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불평등은 인간의 존재론적 본성이라고 보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적소유를 가진 존재이고, 경제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달달눔이 규정한 것(네이밍한 것)이다. 토론하는 동료들은 새롭게 네이밍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리다들은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실천이 달라진다. 내가 토론하는 동료들 만나서 세상을 끊임없이 네이밍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호모 폴리틱우스로서 공동의 무대에 같이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조건들을 다시 재규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도 새롭게 정의하고, 임금에 대한 것도 새롭게 정의하고 토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적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러면 저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태도는 누군가가 혼자 답을 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혼자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달달놈이 될 수 있다. 세상은 마리아들의 대화에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되어야 한다. 마리아의 실천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자선’의 friendly visitor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는 ‘friends with citizen’ 가 되어야 한다.



알린스키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 알린스키는 좋은 사례이다. 그는 미국의 빈민 운동가이다. 알린스키는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고 주장한다. 어떤 신부에게 가서 그는 정의를 말하기보다 그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 “신부님, 저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함께 하시면, 교인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알린스키, 2016).

알린스키의 또 다른 사례는 은행대출과 관련된다. 어느 은행에서 흑인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알린스키는 흑인들에게 소액, 예를 들면 10원씩 나눠준다. 그리고 그들이 저축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10원을 들고 줄을 서서 저축을 한다. 저축이 끝나면, 다시 이들이 이 10원을 찾으러 줄을 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은행업무가 마비된다. 결국 은행은 흑인들에게도 대출해주기로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철학(방향 혹은 전략)이 만들어지면 실천 방법과 전술이 고민되어야 한다. 핵심은 권리의 자각과 그 권리를 자각한 사람들이 힘을 갖게 하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자선형 실천과 달리 권리형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형 실천

유형	소크라테스 유형	벨렌렐러 유형	은발의 표범형
내용	나를 심어봐: 학습과 토론	주위를 둘러 봐: 조사와 연구	함께 만들어 봐: 참여와 조직화
실천	- 학습동아리 - 세대공감활동	- 지역조사 - 사회문제연구 - 지역신문	- 의회/정책 모니터링 - 사회적 경제 - 정치참여

시민들이 권리를 자각하고, 그들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나가는 행위를 자선형 실천과 대비해서 권리형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형 실천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유형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탁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똑똑하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이 틀릴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겼다.

소크라테스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당대의 현자들을 다 찾아다닌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두 자신처럼 모르는 것이 많은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이후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 까지 끊임없이 상대에게 질문한다. 그래서 아테네의 등에(쇠파리)가 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 유형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자선형 실천은 헬렌켈러 유형이다. 헬렌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 끊임없이 사회를 비판한다. 노동의 영역, 참정권의 영역, 장애 영역을 비판했다.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한다. 세 번째는 은발의 표범형이다. 은발의 표범은 독일노인정당이다. 이 노인들은 정당을 만들어 자기들만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권리형 실천은 함께 만드는 것으로 참여와 조직화를 내포한다.

권리형 실천은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고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자기 공간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건강프로그램은 보통 의사들을 초대해서 고혈압, 당뇨 예방법을 공부하거나, 웰다잉인 죽음준비나 자산관리 등을 한다. 이 사회복지사는 ‘개인건강은 그동안 충분히 공부했으니, 사회가 건강한지도 한번 봅시다’ 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체육시설을 조사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인들에게 적합한지 등을 조사해서 이것을 정책제안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과 함께 프랭카드에 ‘청년들이여, 힘내라’ 고 써서 대학에 가서 커피를 주면서 대화의 광장을 만들었다. 대학생들이 감동을 했고 그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여지껏 우리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하러 노인복지관에 간 적은 있지만 노인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힘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고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다. 관점이 바뀌니 실천의 방향과 내용도 바뀌는 것이다.

### 상상상의 길을 만들자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실천할지는 자기 공간에서 자기다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공간이 커뮤니티 센터이고 학습동아리이다. 이 공간에서 달달눔으로부터 벗어나서 토론하는 동료들의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그 학습동아리가 권리형 실천을 하는 마리다들과 함께 법제도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대안사회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어떤 상상들을 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것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의 모토이다. 상상상이다.

그동안 학생들과 공부를 하던 중에 다양한 책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강의가 매개가 되어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하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의 길 기대한다.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야 말로 커뮤니티 센터인 셈이다.

## 5강 후기

5강은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을 수립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과의 토론광장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광장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 서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함께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었습니다.

## 과제. 정책현안연구 : 주민력과 커뮤니티 케어 (부평구 연구사례중심)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점

보건복지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주민력(community empowerment)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초점을 맞춘다. 주민력(Community Empowerment)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지역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민력은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힘을 갖는다면, 당연히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특히 공동체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CC)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②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③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기 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이다(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2018. 6. 7).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력 향상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계획이다. 따라서 지역보장계획의 핵심은 주민력의 강화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계획은 주민력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력은 무엇일까? 주민들이 시민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깨달음이다. 권리는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행복할 것에 대한 것이라면, 의무란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다. 시민성의 눈으로 본다면, 커뮤니티 케어는 시민의 일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즉 주로 취약계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민의 권리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연관되어 있다. 즉 시민의 권리는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는 질병, 소득결핍,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해 의료, 사회보장, 교육, 주거, 고용 등을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사회보장계획은 커뮤니티 케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넘어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케어(social car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성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체가 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이때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케어를 구축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시민들이 갖는 것이며, 지역에서 이런 힘을 주민력으로 개념화한다. 즉 사회보장계획은 주민력 향상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을 권리로 인식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고, 이 시민성에 기반 해서 사회적 돌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주민력은 권리를 공감하고,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케어를 위해 참여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① 권리의 공감

행위의 시작은 공감이다. 사회복지의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면서 인간으로서의 품격, 즉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실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으로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성의 핵심은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의식, 즉 인권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할 권리를 확보해 왔다. 말할 권리인 자유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로서 공포되었다. 시민권은 정치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 그 결과 정치권이 확보되었다.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담고 있다. 즉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보공개, 토론과 정치참여의 경험, 회합과 결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한다.

자유권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자유권적 인권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못했다. 권력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두려운 권력은 생존의 문제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만약 고용주에게 말할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갔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진보정당을 만들어 사회보장을 요구했다. 이때, 상징적인 제안이 베버리지 리포트의 5개 약에 대한 집합적 대응이었다.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는 사회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고용정책 등을 사회권으로 요구했고, 1940년대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생존권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권은 자유권과 정치권에다가 사회권을 보장받을 때 가능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회권이 시민들의 권리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유권과 정치권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은 여전히 갈등적이다. 사회권은 선성장 후분배의 발전주의와 사회주의적 요구라는 반공주의의 시선에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는 동의하지만 시민일반에 대한 사회적 케어에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고령화와 비정규직화, 저출산과 성장동력의 저하 등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 ② 시민의 참여

공감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하지만 공감자체가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공감은 참여를 통해 권리를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인권의 역사는 사회적 갈등과 타협의 역사였다. 갈등과 타협은 제도정치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힘은 시민사회의 변화, 즉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보자. 베버리지는 자신의 구상을 담은 계획, <사회보장과 관련계획>(1942. 일명 베버리지 보고서)을 썼다.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노동당은 집권을 한다면 보고서를 정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시민들은 보수당의 전쟁영웅 처칠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보고서를 현실로 만든 것은 시민들의 토론에 기반한 선택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권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의 역할보다는 시민들의 자각과 참여가 핵심이다. 권리로 자각하고 이 권리를 관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사회권과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계획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이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학습과 자각,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실천과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사회적 돌봄

돌봄은 개인적인 돌봄과 사회적 돌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가족적 돌봄의 일차적 주체는 개인/가족/이웃/마을이다. 이 돌봄은 자선과 시혜의 감정에 기반한다. 즉 사적 영역에서 자선에 기반해서 돌보는 것이 개인적/가족적 돌봄이다.

사회적 돌봄은 말 그대로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의 주체는 공공이다. 국가는 공적인 자원을 가지고 시민이 처한 위험에 개입한다. 이때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의 두 유형이 존재한다. 선별적 복지는 말 그대로 선별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재산이나 의무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를 따져 수급권자를 선별한다. 한편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위험에 대해 공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의무교육, 고용이나 실업 더 나약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의 재원은 공공에서 나온다. 즉 구세군 남비처럼 개인들의 자선에 기대어 종교나 사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돌봄은 재원의 주체나 돌봄의 주체가 국가이다.

### (2) 정부의 계획: 주민력과 커뮤니티 케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와 주민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한마디로 취약계층을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커뮤니티가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는 커뮤니티, 즉 마을이고 커뮤니티의 케어의 대상은 취약계층이다. 한편 커뮤니티 케어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할지를 정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사회보장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보장계획수립의 방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다. 핵심 사업영역은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의 강화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착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등 주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연계·협력 활성화이다. 이는 분절화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공공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력 향상이다. 즉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내에서 지역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의 힘과 영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표3-1〉 중앙정부의 세부추진과제

영역	세부추진과제	
	개정 전	개정 후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변경〉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적용 완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적용 완료
	○ 농어촌 특성화 유형 설치 가능	○ 농어촌 특성화 유형 설치 가능
	-	○ 주민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②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활성화		〈신규 및 변경〉
		○ 공공서비스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 지역사회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영역 ①로 변경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보건복지계획 수립	○ 영역 ③으로 변경
③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신규 및 변경〉
		○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마련(신규)
		○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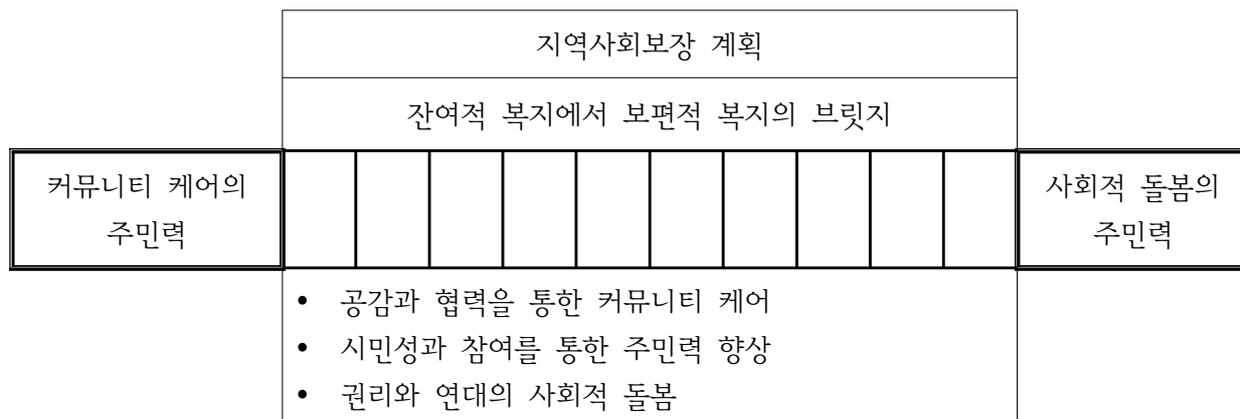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의 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주민력 향상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주민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권리의 공감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돌봄과 차이가 있다. 정부의 계획에서 주민력이 자선과 시혜의 감정에 기반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면, 본 보고서의 입장은 권리와 참여에 기반한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돌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의 입장에서 주민력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자선형의 자원봉사로서 이웃과 마을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권리형의 자원봉사로서 시민들이 문제의 원인을 취약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돌봄의 부족에서 찾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권리의 자각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부에 사회적 돌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자기 공간에서 권리를 찾는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입장이다.

### (3) 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전략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의 사회보장계획의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를 향한 주민력 향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사회적 케어를 향한 보편적 복지없는 커뮤니티 케어만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커뮤니티 케어를 향한 주민력으로 시민성과 참여를 통한 보편적인 복지의식과 주민력을 형성될 수 있을까?

이상의 질문의 맥락에서 부평형 복지계획은 커뮤니티 케어에 기반하되, 장기적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국가의 사회적 돌봄을 권리로써 주장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형성, 즉 주민력 강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사회보장계획을 담고자 한다. 이는 부평형 복지계획이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주민력을 목표로 삼되,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사회적 돌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을 요구하는 주민력 향상을 형성하는 것에는 기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과 참여를 통해 가능한데, 교육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자선을 교육하는 기존의 교육을 사회적 돌봄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형 자원봉사와 참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 된다. 즉 기존의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커리큘럼, 강사, 콘텐츠 등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연구회 혹은 시민교육센터 등의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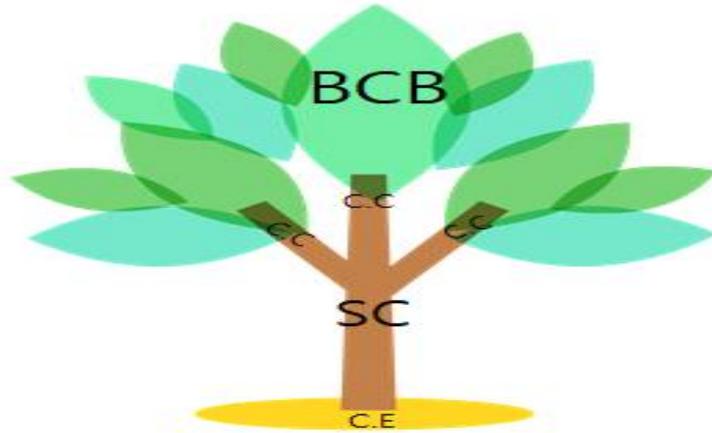
참여의 경우도 기존의 자원봉사가 빈곤독거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 즉 도시락·김치 등의 생계형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다면, 권리형 자원봉사는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제, 협동조합 등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참여에 대한 지원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커뮤니티 케어의 자선형 참여의 실천에서 사회적 돌봄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권리형 참여의 실천으로 사회보장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보장계획은 커뮤니티 케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커뮤니티 케어의 주민력을 점진적으로 사회적 돌봄의 주민력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를 형성하는 전략과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부평형 커뮤니티를 빌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사회보장계획의 방향이다.

#### (4) 부평형 커뮤니티 빌딩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주민력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부평구 케어 빌딩(BCB)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력(community empowerment)이고, 둘째, 사회적 돌봄(social care) 그리고 셋째 커뮤니티 케어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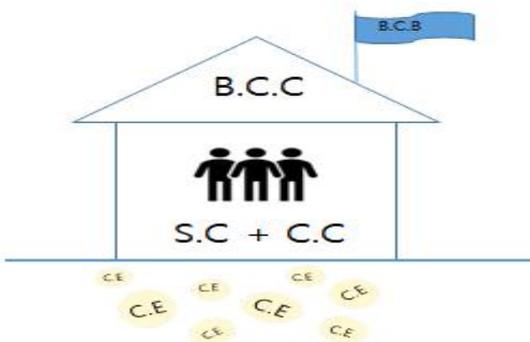
[그림3-2]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도



[그림 3-2]에서 보듯이 부평구 커뮤니티 빌딩(BCB)은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나무의 기둥에 해당하는 사회적 돌봄,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돌봄의 원천인 주민력으로 구성된다. 나무가 존재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견뎌내려면 뿌리와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 이 두 개의 기반 위에서 나뭇가지가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시민성의 자각과 이런 시민성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참여인 주민력이다. 주민력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점차 튼튼한 기둥을 형성해야 한다. 나무의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적 돌봄이다. 현재 한국의 보편적 복지를 향한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사회보장계획은 이것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케어이다. 하지만 이것에만 머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계획은 우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회적 돌봄의 토대 즉 시민성의 자각과 실천을 위한 주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부평구 주민의 집 구상과 방향



이상의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 부평구 주민의 집이다. 주민의 집이라는 구상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위한 국민의 집이라는 모델로부터 연원한다. 모든 시민이 하나의 집에서 살 듯 부평구의 주민이 하나의 집인 부평구 주민의 집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평구 주민의 집에 대한 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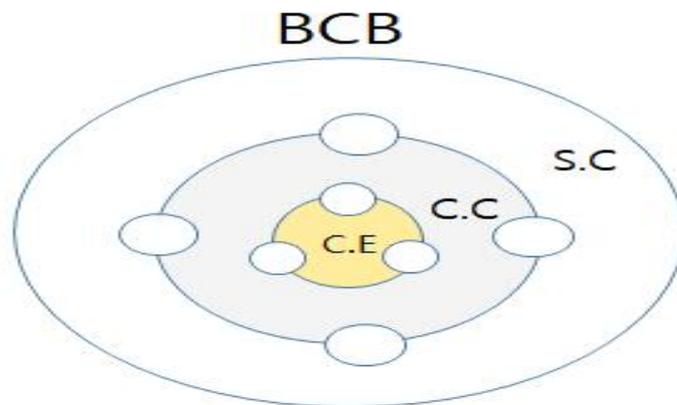
[그림3-3] 부평구주민의 집 구상

구체적으로 부평구 주민의 집은 부평형 커뮤니티 케어(BCC)를 통해 실현된다. 건축물로 보면, 토대는 주민력을 통한 공동체의 돌봄을 추구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임파워먼트(community empowerment), 즉 CE이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시민성과 참여를 통한 CE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고자 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계획을 담는 한편 본 보고서는 부평구 주민들이 커뮤니티 케어(CC)와 사회적 돌봄(SC)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주민이 사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은 중앙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와 연대의 사회적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자 했다. 특히 부평형 커뮤니티케어가 되려면 부평의 구체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부평형 커뮤니티 빌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평의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6) BCC와 주민력을 위한 방향

부평형 커뮤니티 빌딩(BCB)은 주민력에 기반하여,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한다. 주민력은 생존문제에 있는 주민들이 SC+CC의 지원하에 CE를 향상하여 실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도와준다.

[그림3-4] BCC와 주민력을 위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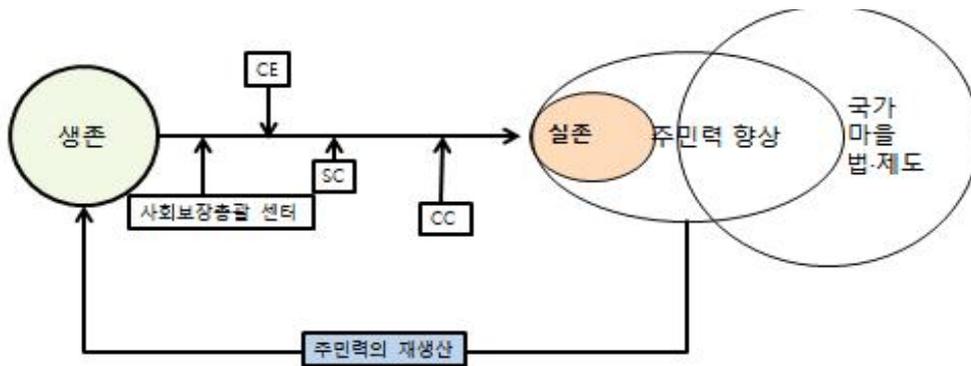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부평구 커뮤니티 빌딩은 가운데의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핵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민력의 향상은 커뮤니티 케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으로 향하는 국가, 마을, 법제도에 참여하는 시민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력 향상을 통한 복지 공동체 부평’이라는 비전에서 보듯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은 주민력의 향상인데, 본 사회보장계획은 주민력이 커뮤니티 케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실천하는 민주시민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기존의 주민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총괄하는 지원기구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교육과 동별 마을만들기, 부평구 사회보장연구회 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주민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과 시민리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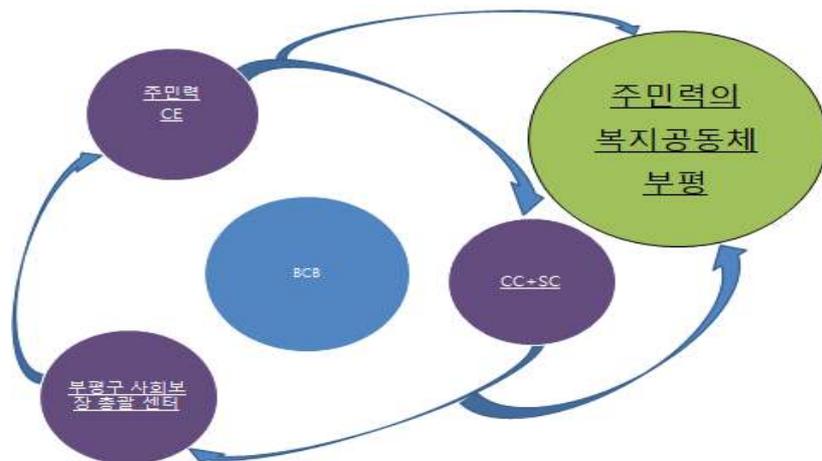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취약계층의 생존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 돌봄은 생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선을 공공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력은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서는 생존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묻고 실천하는 실존으로 가는 사회적 토대를 확보하는 시민들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총괄센터의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3-5] 주민력을 계획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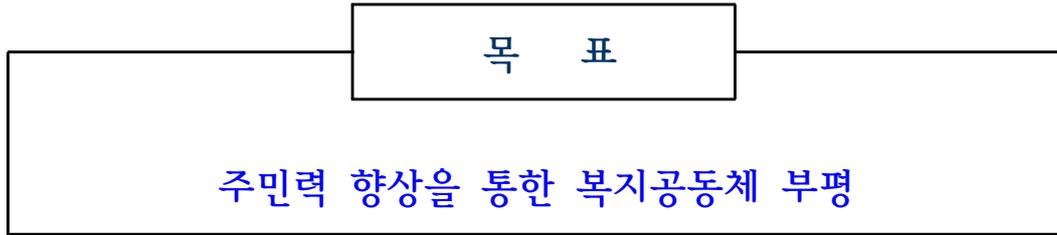


[그림3-5] 주민력을 계획도 2



주민력향상을 위한 지원조직인 사회보장총괄센터는 주민력향상, 사회적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고 경험하는 지휘본부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단번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기 사회보장계획에서는 이를 실현한 공무원 혹은 리더교육과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부평구 사회보장연구회 등을 형성하고, 동별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주민력 향상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community empowerment**

**공감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권리와 연대의  
사회적 돌봄  
social care**

<b>점 사 업</b>	사회보장계획 수립(마을계획) (신)
	책 읽는 부평(기)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지역평생교육활동가사업
	구민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사업
	임신, 출산, 육아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평구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

<b>중 점 사 업</b>	민관협력 지역사회보호 체계운영 (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확충(기)
	부평형 세어(공동)주택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지원
	우리동네 맥가이버사업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운영
	부평형 청년인턴 사업
	청천동 홀소리어울림 사업

<b>중 점 사 업</b>	사회보장연구회 운영 (신)
	민·관협력 지역복지사업(기)
	교육여건개선 및 선진교육 환경조성
	베이비부머 역량강화 (5060부평인생학교)
	선배시민(노인) 사회참여 지원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입차운영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어린이집 안전점검

※ 중점사업에서 ‘신’ 은 신규사업, ‘기’ 는 기존사업을 의미